

2004년 청소년 5대 인권운동 토론회

일시 : 2004년 12월21일(화) 오후 5시

장소 : 국회헌정기념관 소강의실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2004년 청소년 5대 인권운동 토론회

일시 : 2004년 12월21일(화) 오후 5시

장소 : 국회헌정기념관 소강의실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식 순

- 사전마당** [영상] 영상으로 보는 2004년 청소년운동
[인사말] 2004년 청소년 5대인권운동 토론회를 열며
- 유선희 | 민주노동당 청년학생청소년 담당 최고위원
- 청소년 5대 인권운동 발표** 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0교시 폐지 투쟁
- 이강훈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 인천외고 투쟁
- 노현성 | 인천외고 파면 철회 학생대책위원장
박탈당한 우리의 정치참여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 - 18세선거권찾추기운동
- 신정현 | 18세선거권찾추기공동대표
학교내 종교의 자유와 학생인권
- 강의석 | 대광고 학생회장
학교의 당당한 주인이 되자! - 학생회법제화운동
- 박상호 | 학생회법제화운동본부
- 민주노동당 활동보고** 교육위활동 및 청소년관련활동 보고 및 질의
- 최순영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신설 취지와 방향
- 구정인 | 청소년위원회 준비위원장

차 례

■ 사전마당	[인사말] 2004년 청소년 5대인권운동 토론회를 열며	2
■ 청소년 5대 인권운동 발표	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0교시 폐지 투쟁 - 이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4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 인천외고 투쟁 - 노현성 인천외고 파면 철회 학생대책위원장	27
	박탈당한 우리의 정치참여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 - 18세선거권낮추기운동 - 신정현 18세선거권낮추기공동대표	33
	학교내 종교의 자유와 학생인권 - 강의석 대광고 학생회장	38
	학교의 당연한 주인이 되자! - 학생회법제화운동 - 박상호 학생회법제화운동본부	50
■ 민주노동당 활동보고	국정감사를 마치며... - 최순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57
	청소년위원회, 적극 활용하고 힘을 모아주십시오 - 구정인 청소년위원회 준비위원장	61

여는 말

2004년 청소년 5대 인권운동 토론회를 열며...

청소년은 언제나 교육받아야 할 대상, 배워야 하는 어린 아이로 여기는 사회적 통념을 깨고, 2004년 올 한해도 세상을 향해 힘껏 목소리를 외치 온 멋진 청소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입시라는 틀에 얽매어 있고, 작은 사회적 활동도 학적으로 옹아매어 정계를 서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청소년들이 과감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외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기성 세대에 기대고 바라기 보다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처지를 변화하고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끊임없는 자기와의 투쟁, 학교와의 투쟁, 사회와의 투쟁을 벌여나간 것은 어쩌면 우리 현실 속에서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까닭에 올 한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벌인 인권운동, 사회와 종교관련 운동, 계단비리와 입시반대운동, 정치참여 활동, 교육개선 운동 등 여러 방면에서의 투쟁은 기존의 청소년 운동에서보다 더 한 단계 앞서나간 모두 소중하고 뜻 깊은 활동이었습니다.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에서는 그런 활동 중에서 특히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익을 찾고,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 『청소년 5대 인권 운동』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운동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이후 청소년 운동의 발전방향을 구체적 현실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올해 2월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발표된 이후,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는 강제적 자율학습·보충수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학교에 묶여있던 청소년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불법적 강제자율보충학습 시행 신고사이트'에 1천건 이상의 사례를 신고하였고 전교조는 시도지부 교섭을 통해 0교시를 폐지했습니다.

작년 3월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학사운영에 항의해온 교사들을 파면하면서 인천외고는 교사, 학생, 학부모 공동대책위를 꾸리고 200일 이상 투쟁했습니다. 특히 학생대책위는 수업을 전면 거부하고 무기한 단식, 삭발식 등의 완강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지만, 선생님 두 분의 복직판결을 받아냈고, 학생들의 인권을 억압하던 단발령, 성적순 시설물차별이용 벌점제도 유급제도가 모두 폐지되는 등 뜻깊은 성과를 남겼습니다.

대선에 이어진 총선에서도 18세 청소년들은 투표를 할 수 없었습니다. 18세 선거권 인하여구는 슬그머니 내려가고 한나라당은 19세 선거연령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들은 선거권 낮추기 운동 공동연대 등을 꾸려 청소년을 정치의 주인으로 인정해달라며 활발한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청소년운동의 최대 이슈였다고 말할 수 있는 강의석군의 단식입니다.

강의석군의 단식은 한국사회에서 학생이 근본적인 입시개혁이나 종교개혁과 같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단순한 개인의 예배선택권을 갖기 위해서도 목숨을 건 투쟁을 해야 한다는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의 끝자락에 그동안 통제와 감부로 시달려온 학생회 임원들이 학교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학생들의 대표기구로 인정받고 학생들을 대변할 수 있는 학생회가 되기 위해 학생회 법제화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2004년은 다른 어떤 해보다 청소년들이 자기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한해였습니다.

올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벌였던 5대 운동을 한자리에 모아 경과와 교훈을 들이봄으로써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배우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초로 원내로 진출한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의 국회 교육위 활동과 신설한 청소년위원회의 활동 보고와 소개를 통해 청소년운동과 당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자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2004년 청소년운동을 마무리하고 2005년에 더욱 힘차게 활동할 것을 격려하고 다짐하는 토론회 자리가 될 것입니다.

2004년 12월 21일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0교시 폐지 투쟁

이강훈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 운동 경과

<2월>

2월 17일 교육부는 "0교시 강제 보충, 자율학습을 정당화하고 이를 중학교까지 확산시키는 내용의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발표함. 이에 따라 2월 말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안을 준용하여 '방과후 교육활동 지침'이라는 명목으로 보충수업, 자율학습을 중학교까지 확산시키는 시행 지침을 마련함. 전교조 중앙 및 16개 시도 지부는, 입시준비를 학교의 기능으로 정착시키려는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확대 방침 및 EBS 수능방송을 핵심 내용으로 한 단기 대책을 <학교학원화 정책>이라 분석, 규정하고 각 단위 논의를 거쳐 '학교학원화 저지 투쟁'을 전국 투쟁(전국통일원칙 설정), 현장 투쟁(상층대응과 결합)으로 만들어감.

2.17 교육부, 『사교육비 경감방안』 발표

2.19 전교조, 입장 공식 천명 (기자회견)

<기자회견 발표 내용>

- ◇ 정부의 '사교육비 종합대책'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 1. 정부의 '사교육비경감 종합대책'은 '학교 입시학원화 종합방안'
- 2. 정부의 '사교육비경감 종합대책'은 새로운 것 없는 '총선용 재탕공약'
- 3. 정부의 '사교육비경감 종합대책'은 사교육도 못 잡고 학교도 파행으로 돌아가는 '동반자살'
- 4. 단기대책은 '학교 학원화정책', 중기대책은 '학교 시장화정책', 장기대책은 '구색 맞추기'
- ◇ 전교조가 제안하는 '사교육비 해소 종합방안' 및 대학입시 개혁안

<3월>

3월 각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시행계획 내용

- *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학교자율'에 맡기고 있어서 편법, 파행을 정부당국이 조장하는 격이었음. 교육부 역시 실무교섭 과정에서 편법, 파행의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자율성의 시대인데 획일적 규제는 건 어렵다'는 식의 이중적 입장을 표명.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면서 '파행을 막기 위한 전국 통일 금지 사항'을 공문 시행할 것을 요구.
- * 충남 : 고교비평준화 및 경쟁선발고사 실시로 중학교도 대부분 보충수업 실시해왔으며 이번 방안을 계기로 중학교까지 자율학습 확대 방침을 세움. 대응에 가장 난관을 겪었음.

	0교시	아자시간	강제시행	야간보충	중학보충
서울	금지	22:00이후 금지	금지	공식 언급없으나 교육감은 안된다는 입장인 듯	허용 (별도 언급 없음)
경기	자율	자율 "학생의 심신과 건강을 고려하여 무리한 운영을 지양" - 애매하고 강제력 없는 표현	자율	22:00까지 허용	허용 (별도 언급 없음)
인천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강원	언급 없음	22:00까지를 원칙으로 하나 학생, 학부모 요구시 학교장은 실정 고려하여 23시 이내로	보충1일 3시간이내, 주15시간 이내 계획상 강제·획일적 편법 운영금지	19:00까지 가능	1일2시간까지 허용
충남	자율	자율	금지	자율	자율
충북	자율	규정없음	계획 : 희망 실제 : 강제	자율	자율
전북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광주	서류상 금지 실제 진행	자율	금지 (실제 : 실시)	자율	자율
전남	"너무 이른 시간 가급적 지양" (애매한 표현)	22:00이후 "가급적 지양"	계획상 금지 실제 방관	자율	자율
대구	자율	자율	계획상 '엄정대처' 실제 방관	자율	자율
울산			보충 1일 3시간 까지 허용		자율 (부활 중임)
부산	1학년폐지 2,3학년유지 7:50	1,2학년 21:00 3학년 23:30	사실상 강제	언급 없음 실제 이루어짐	자율
제주	서류상 금지 실제 진행	22:00이후 금지 방학 때 자율	금지 사실상 강제	자율	자율

3월 전교조 각 단위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조직적 대응을 결의

보충·자율학습 전면부활 관련 전국통일 방침

1. 중학교 보충부활 저지
2. 고등학교 파행운영저지
 - 1) 0교시, 야간 보충 금지
 - 2) 보충·자율학습 강제실시 금지
 - 3) 불법찬조금 거출 금지
 - 4) 관리수당 부활 저지

3.22 전교조 홈페이지, 불법 보충, 야자 고발창구 설치

=> 한겨레 신문에 고발창구 설치사실이 보도되자, 전국적으로 다수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생한 고발글을 대거 올림.

<주요 고발 사항>

0교시, 야간보충수업, 강제적 보충, 자율학습, 불법찬조금 거출
시청료 징수 등 EBS e-learning 비판, 관리자(교장·교감)에 대한 관리수당 지급 등

3.25 민주노동당, 교육분야 7대 현안 14대 핵심 공약 발표

그 중 학생 복지, 인권, 자치 영역에서 다음을 공약으로 명시.

▶ 학생건강권 보호 : 0교시 폐지, 야간 보충·자율학습 금지, 강제보충수업 금지, 미성년자 대상학원의 경우 영업시간을 오전 9시 이후와 오후 9시 이전으로 제한.

3.26 경기도 세원고 김형석 교사, 보충수업 도중 순직

<4월>

4.2 전교조, '사교육비 경감방안' 발표 이후 학교현장 파행 실태 발표

<언론 보도 - 4월3일자 일간지>

[한겨레] 0교시 앞서 마이너스 1교시도 ; 고교 아침 6시 30분 등교...반강제 보충, 자율학습
 [국민일보] 학교 보충, 자율학습 파행운영; -1교시 수업 밤 12시까지 강제학습에 학부모 찬조금도 걷어
 [한국일보] '0교시'도 모자라 '마이너스1교시' ; 강제 자율, 보충 여전
 [세계일보] 0교시·보충수업 여전 ; 일부학교 찬조금 강요
 [서울신문] 6시30분 등교, 밤11시 하교 ; 고교생 힘겨운 '강제학습'
 [경향신문] "보충·자율학습 편법·번칙 판처" ; 전교조 실태 공개 ...보충수업 거부 서명
 [서울경제] "보충...자율학습 파행운영" ; 사실상 강제시행, 찬조금 강요, '마이너스 1교시' 등 시간 연장 운영

(전교조 각 시도 지부를 통해 자체 조사)

4.8 전교조 "강제 자율학습 0교시 반대, 입시구조 개혁 촉구" 전국교사선언 (2만여명 참여)

<결의 내용>

중학교 보충수업을 전면 거부
'수준별 이동수업' 거부
'0교시', '야간강제 보충수업', '불법 찬조금', '관리수당' 등 파행적 보충수업 거부

4.20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방과 후 교육활동' 운영방안 발표.

'정규수업 전 0교시'와 '오후 7시 이후 보충학습'은 금지하고 '오후 10시 이후의 자율학습' 지양, 보충 학습은 최대 주당 12시간 이내 시행, '자율학습 및 EBS 시청 지도비'는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 '초·중학교의 방과후 교육활동'은 특기·적성교육으로 운영 등.

4.27 교육부-전교조 2차 본교섭에서 0교시 폐지에 합의함.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 합의사항

가. 0교시 폐지에 합의하고, 0교시 정의를 대하여는 '각 단위 학교에서 규정한 복규정 시간 이전에 수업하거나 강제로 등교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리수당(교장, 교감, 행정실장)은 학생부담경비가 아닌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해결한다.

나. 교육부가 안으로 제시한 교육감협의회의 '방과후 교육활동운영방안' 내용과 전교조의 요구사항이 상충하여 합의하지 못한 부분(고등학교 보충학습 시간수, 농어촌 중학교의 보충학습 실시여부 등)과 가칭 공동감시기구의 구체적 구성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제7차 실무교섭에서 논의한다. (공동감시기구 명칭에 있어서는 유연성을 부여한다.)

* 4월 말~ 5월에 걸쳐 16개 시도지부와 교육청 간 합의가 대부분 이루어짐.

<5월>

5.10 전교조, 파행적 보충/자율학습 근절 촉구 기자회견

- 사교육비 경감 대책 관련 교사, 학생,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 이후 보충 자율학습 상황 및 현장 파행사례
- 파행적 보충, 자율학습 근절을 위한 전교조의 향후 대응방향 및 활동 계획

5.18 "0교시, 강제 보충 자율학습은 인권 침해", 전교조 등 교육단체, 인권위에 중단 요청 진정서 제출

진정인: 전교조,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피진정인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6월>

6. 1 인권위 중재 제안

교육부는 인권위에 0교시 강제 보충, 자율학습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음을 시인함에 따라 인권위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사이에 존재하는 정적적 견해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하여 중재를 제

안하였고 전교조가 진정인을 대표하여 중재에 응함)

<7월>

7. 9 인권위원회 중재 하에 전교조-교육부 1차 협의.

쟁점 사항 : 등교시간 명시 / 주당 보충수업 허용 시수 명시 / 방과후 교육활동에 관한 지역별 협의체 구성

7. 21 인권위원회 중재 하에 전교조-교육부 2차 협의.

* 쟁점 사항에 대한 협의 실패

11. 21 전교조 인권위에 추가자료 제출 (5개 지역의 인문계고 학생 생활 실태 조사)

* 협의 도출 실패 이후 인권위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임.

2. 전교조 시도 지부-교육청 간 협의 진행 경과 및 내용

가. "중학교 보충, 자율 금지, 0교시 폐지, 강제 보충/자율 학습 금지"

- 대부분 시도지부에서 타결.

나. 야간 보충, 야간 자율학습 시간 규제에 대부분 합의

나. (가칭) '공동감시기구' 구성, 운영 - 서울, 대구, 부산

(인천의 경우 단협 조항으로 타결을 시도하였고 대부분 합의에 이르렀으나 단협 자체가 난항을 겪으면서 협의 이행이 지연)

다. 주당 보충수업 허용 시수 명문화

- 서울, 대구, 경남만 시도교육감 협의보다 나은 수준으로 합의.

라. 공동감시기구 및 주당 보충수업 시수 규정에서는 '교육부-전교조본부'와의 협의 사항에 준하여 추후 결정하기로 한 곳이 다수.

지역	진행경과	협의 사항			
		금지사항	보충시수규정	공동감시기구	행정조치
강원	4/30 협의	0교시(정규수업 시작 전) 금지 희망학생에 한해 보충, 자율 실시 고교자율학습10시까지만 실시 중학교 보충학습 금지, 종전의 특적으로 운영	없음	없음 (도교육청은 번칙 운영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공문, 장학지도 실시)	민원발생시 현장확인을 통하여 행정지도 및 경 고하며 재발되지 않도록 문제점, 개선사항을 각급 학교에 공문으로 시행
경기	3일간 농성 후 4/29 보충자율 학습관련 단체 교섭내용 잠정 협의	0교시 폐지 야간보충학습금지 중학교 보충학습 금지 강제 보충, 자율 어떠한 경우도 금지 초중학교 방과후 교육활동은 특 기적성 교육으로만 운영	없음	공동감시기구의 구성 운영은 교육 부와 교우너노조 와의 단체 협약 체 결 결과를 준용	
경남	5/7 협의	중학교 보충, 자율 금지 고등학교 학생, 교사 희망에 따라 실시 0교시 금지 (복무시간 이전 수 업, 강제 등교 금지) 1,2학년 오후6시, 고3 7시 이후 보충금지 자율학습 고1,2 밤 9시 이전까 지, 고3 밤10시 이전에 종료	1,2학년 -5시간 이내 3 학 년 -10시 간 이내	교원노조가 참여 하는 공동감시기 구 구성	지침위반시 위반사항 시 정공문 발송->기관주의, 경고->행, 재정적 제재조 치
경북	농성 끝에 5/8 [경상북도 교육청 지침]수 정에 협의 5/17 각급 학교 공문시행 6/1부터 새로운 지침 적용키로. 6/10 수정지침 이행여부 조사	희망교사, 학생, 교과에 한해 실시 하고 교과진도 진행 금지 8시이전 일제등교 금지 8시20분이전 수업 금지 특별, 재량활동 번칙운영 금지 18시30분 이후보충 및 22시 이 후 자율학습금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 일 제 자율학습 금지	없음	없음	편법, 파행시 행정지도 지침위반, 불법시행시 특 별조치(구체내용은 없음)

	결과 발표(불법, 편법 다수)				
광주	농성끝에 5/6 합의	0교시(정규수업전), 오후7시이후, 공휴일 보충학습 금지 10시 이후 자율학습 금지 고1,2 8시 이전 강제등교 금지 중학교 방과후 교육활동은 특기적성교육으로 운영	없음	상설장학반 운영 (교육부-전교조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행 방안 차후 논의)	지침 미이행 학교는 변칙운영정도에 따라 시정 조치 및 기관주의/경고, 지원금 감액 등 행정적 제재 조치 마련 시행
대구	5/3 합의 5/15부터 적용	학생 희망에 따라 보충학습 실시 0교시(단위학교 규정 복무규정시간 이전)금지 고1,2 18시, 고3 19시 이후 보충학습 금지 고1,2 21시이후, 고3 22시이후 자율학습 금지 성적순으로 편성한 특별자율학습반 운영 금지	고1, 2 주 5 시간, 고3은 12시간이내	교원, 학부모대표, 교원단, NGO, 교육청으로 협의체 구성	시정공문->기관주의/경고->행/재정적 조치
대전	5/1 합의 5/3 공동보도문, 공문시행하기로 합의	중학교 보충은 저소득층, 학습부진자에 대해서만 실시 가능 고등학교 보충은 학생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율학습은 순수희망자에 한해 실시 오전8시 이전 일제등교 금지 오후 7시 이후 보충학습 금지 22시 이후 자율학습 금지		편법, 파행운영에 방을 위해 교육청과 전교조가 공동으로 노력	변칙운영 사례 접수시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 지도(구체 내용 없음)
부산	5/7 합의	0교시 금지 (정규수업 이전) 중학교 방과후 교육활동은 특기적성으로 운영 강제 보충, 자율 금지-철저히 희망자에 한해 실시 교과진도 금지 야간자율학습 1,2학년 21:00이후, 3학년 22:00이후 금지	교육부 지침이 확정되면 재협의	교육청에 (가칭)운영실태 점검반 구성, 운영 방과후 운영협의체 교원, 학부모대표, NGO, 교원단체, 교육청 합동 구성 운영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정공문발송->기관주의, 경고->행, 재정 제재 조치
서울	4/19 합의	초중학교 방과후 교육활동은 특기적성교육으로만 운영 정규수업시작전 0교시 금지 보충, 자율-희망자	고3 주당10시간이내 고1,2 주당5시간이내	교원단체, NGO 교육청합동으로 협의체 구성	위반3차 발생시, 인사 및 행정적 제재 조치
울산	5/7 합의 합의에 따라 마련한 지침을 공문으로 시행하고 6/1부터 전면시행토록 함.	초중학교 보충학습, 방과후 자율학습 금지 0교시 금지(단위학교에서 규정한 복무규정 시간 이전에 수업하거나 강제로 등교시키는 것을 금지) 오후7시 이후 보충학습 금지 22시이후 야간자율학습 금지		(가칭)공동점검반 구성은 교육부-교원노조 합의가 확인되면 추후 실무 협의회를 통해 구체 방안 논의	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파행, 불법운영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위반시 행정적 조치

		휴일, 법정 공휴일 자율학습 지양 EBS방송, 보충학습 내용 정기교사 출제 금지 보충학습을 이용한 교과진도 금지 특적, CA, 재량 변칙 운영 금			
인천	5/19 단협 조항으로 논의하여 합의 시도하였으나 수업시작 시간 등이 쟁점으로 남아있으며 단위학교에서 조직적으로 반발. 인천외고 사태로 농성 장기화.	오전 8시30분 운영(쟁점) 0교시 폐지(각 단위에서 규정한 복무규정 시간 이전 수업, 강제등교 금지) 19시 이후 보충학습 금지 야간 자율학습 22시까지만 운영 토요일 13시이후, 공휴일 보충, 자율 금지 중학교 방과후 교육활동은 특기적성교육으로 운영		교원, 학부모단체, NGO, 교원단체, 교육청방과후 교육활동 운영 협의체 구성, 운영	위반사실이 드러난 경우 시정공문->기관주의, 경고->행정적 조치
전남	4/29 합의 5/3 교육청측 일방파기 투쟁 끝에 재협의 하여 5/10~21도 교육청 농성. 5/21 교육감사과, 관련자문책을 전제로 합의 재개하고 재협의 5/24 합의공문 시행	희망자에 한해 실시 0교시 금지 (0교시는 단위학교 복무규정시간 이전 시간이며 학생들의 의무적 등교시간을 늦춰서 실질적 건강권을 보장) 고1,2 18:00이후 보충 금지 초, 중학교 방과후 교육활동은 특기적성교육으로 실시	없음	없음	정기적 공문시행, 장학지도와 학교평가시 운영상황 확인하여 적극지도 민원발생시 현장확인 통해 행정지도
전북	전북지부장 열흘 단식 4/6 합의	중학교 보충 금지 0교시(정규수업 이전) 금지	없음	없음	없음
제주					
충남	17일간 지부장 단식 농성 끝에 5/15 합의서에 의한 지침을 공문으로 시행하고 6/1부터 전면시행하기로 합의	중학교 -학습부진자, 저소득층 자녀만 희망자에 한해 실시. 정규수업전 보충금지, 방과후 자율학습 금지 고등학교 0교시 금지(등교시간규정없음) 야간보충 1,2학년 18시, 3학년 19시이후 금지 22시 이후 자율학습 금지	중 3 면 지역 주 5 시간 이내	없음	지침 위반시 점검반 구성하여 행정지도, 불법사례 발생시 엄중조치(구체 내용없음)
충북	4/9 단체교섭 본교섭을 통해	0교시 금지(정규수업 이전 등교강요금지)	없음	상설장학반 활동 및 점검결과를 교	편법운영 경우 시정조치 및 기관주의/경고

합의	획일, 강제 보충, 아자 금지 보충학습 내용 정기고사출제 금지 우열반 편성 금지 특적, CA, 재량활동 변칙운영 금지 22:00이후 야간 자율학습 금지 (고3은 23:00)	원노조에 통보	민원3회이상 제기된 학교는 지원금 감액조치
----	---	---------	-------------------------

3. 인문계고 학생 생활 실태 조사 결과 (11월 현재 상황임)

① 0교시, 강제 보충, 자율 학습은 0교시 폐지 방침에 각 시도 교육청 및 교육부가 교원노조와 합의를 도출한 이후 비교적 완화된 것으로 보임. 완화의 이유는 2.17 사교육비 경감방안에 의한 교육부의 보충, 자율학습 확대방침에 대해 전교조가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결과, 미흡하나마 교육감협의회 결의,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0교시 폐지, 강제 보충, 자율학습 지양 원칙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됨.

② 하지만, 학생인권침해의 0교시, 강제 보충 자율학습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 0교시 및 학생의 결정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보충,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써 지금 수준의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불가 원칙'만으로는 사태 해결 방안으로서 불충분함을 알 수 있음.

③ 조사 항목별 결과

가. 0교시 운영 학교 수

0교시 운영 학교는 줄어든 것으로 보임. 하지만, 교육부의 0교시 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으로 0교시를 운영하는 학교는 여전히 존재하며,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21% (인천 포함할 경우 27%)에 이르고 있음.

나. 학생 등교시간

0교시가 많이 사라짐에 따라 0교시 금지 이전에 비해 학생 등교시간도 더불어 늦추어진 것으로 판단됨. 특히, 7시 이전 등교는 많이 사라진 것으로 보임. 하지만 이른 등교시간이라 볼 수 있는 8시 이전 강제 등교 학교가 여전히 다수 존재하며, 1,2학년은 16%, 3학년은 21%에 이르고 있음. 즉 3학년의 경우 다섯 학교 중 한 개 꼴로 이른 등교를 강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다. 1교시 시작시간

성인 근무 시작 시간과 중학교 수업시작시간인 9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8시 30이전에 정규수업을 시작하는 학교가 여전히 적지 않음. 1,2학년은 11%, 3학년은 21%에 이룸.

라. 주당 운영 보충수업 시수

보충수업을 운영하지 않거나 5시간 이내로 운영하는 학교는 1학년 31%, 2학년 29%, 3학년 23%에 불과하며 하루 1시간 이상 보충수업을 운영하는 학교가 1학년 69%, 2학년 71%, 3학년 77%에 이르고 있음.

마. 보충수업의 학생의 참여 결정권 여부 (강제성 여부)

보충 학습은 학생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며 강제 실시는 분명한 지침 위반임에도 다섯 학교 중 한 학교 꼴로 (21%) 학생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채 강제로 실시하고 있음. 전남 지역의 자료를 제외하면 절반 가량이 여전히 강제 보충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바. 야간 자율학습 종료시간

대체로 9시30분에서 10시까지 운영하는 학교가 가장 많으며, 10시 이후까지 운영하는 학교는 1학년 10%, 2학년 12%, 3학년 46%에 이르고 있음.

사. 자율학습의 학생 참여 결정권 보장 여부 (강제성 여부)

네 학교 중 한 학교 꼴로 자율학습을 강요하고 있음. 전남 지역의 자료를 제외하면 절반 가량의 학교가 강제로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아. 하루 평균 학생이 학교에 있어야 하는 시간

성인의 하루 노동시간에 해당하는 8시간 이내만 학교에 머무르는 경우는 한 곳도 없었음. 대부분이 하루의 절반인 12시간 이상을 학교에 머물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1학년은 82%, 2학년은 81%, 3학년은 84%였음. 또한 등교시간이 대체로 8시에서 8시 30분 사이, 자율학습 종료시간이 9시 30분에서 10시 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인문계 고등학생은 하루에 13~14시간 가량을 학교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보충 수업과 자율학습 참여 결정권의 보장이 절반 남짓함을 감안하면 전체 학생의 절반 가량은 강제로 하루 절반 이상을 학교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옴. 결국 하루 세끼 중 아침은 일찍 등롱하느라 기르기 일쑤고, 점심과 저녁도 학교에서 먹어야 하는 게 한국 인문계 고등학생의 생활 실태임.

4. 성과와 과제

① 전교조 운동의 차원에서

- 최초의 전국투쟁 전개 : 중학교까지 보충수업을 확대하고 고등학교의 파행적 입시위주 교육을 정책화하는 등 학교의 입시기능을 강화하는 시도에 대해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대응하였음.
- 장기간 '부조리'라고 인식하면서도 대학입시경쟁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패배적으로 순응해온 입시위주 교육에 대해 처음으로 현장투쟁을 결의하고 대응하였음.
- 또한 사교육비 문제, 과도한 학습노동 강요를 근절하는 대안은 입시제도개혁임을 인식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알려내면서 올해 사업의 중심기조인 공교육개편운동의 관점에서 학교학원화지지 투쟁을 설정하고 실천하였음.
- 작년 네이스 투쟁에서의 정보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시킨데 이어, 과도한 학습노동에 대해 건강권 등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였음.
- 하지만, 지역별, 학교별, 급별 차이로 강력한 현장거부 투쟁을 수행하지는 못하였으며, 현장 상황을 고려한 결과 '보충, 자율 완전 폐지'라는 원칙적 목표를 내걸지 못하고 '강제 보충, 자율 지지'로 목표 수위를 낮추었음.
- 시도지부와 교육청 간 합의에 있어서 전국통일지침이 기본이긴 하였으나 지역별 차이를 극복하면서 통일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집행부의 지도력과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했음. 특히, 0교시 폐지를 대부분 결정했음에도 주당보충수업시수에 대한 시도교육감 협의보다 진전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경우,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악용하여 정규수업시작을 앞당기는 등의 편법이 나타나고 있음.
- 시도교육청과의 합의 이후 이행 점검 등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진전의 이원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조직적 반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인권위원회의 중재-협상 결과에 따라서 전국적 가이드라인 확보의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이 역시 이에 대한 이행 점검과 현장 대응이 수반되어야 함.
- 하반기에는 입시제도의 개편방향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예상됨. '학교학원화 지지' 투쟁의 정당성과 최종 승리의 여부는 입시제도 개편에 있어서 인권과 평등이 존중되는 방안을 획득하는 것으로 판가름 날 것임.

② 학생의 참여에 있어서

- 조직화된 학생주체들과의 상층연대는 일부 이루어졌음. (성명서 발표, 인권위 공동 제소 등)
- 홈페이지 고발창구라는 참여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조직화되지 않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나 그것을 더 이상의 조직적인 행동으로 연결해내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

③ 의식적인 운동이 필요한 지점들

- 입시제도 개편을 통한 학생인권침해 근절과 인권 신장이라는 근본지점과의 연결고리가 미약했음. 고발장구에 올라온 글들도 대부분은 현상적 실태에 대한 고발은 많았으나 이를 의식적으로라도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으로까지 연결시켜야 했으나 그러지 못하였음. 다만, 고발장구를 하반기에는 고교등급제 피해사례 신고 센터로 전환함으로써 소극적인 시도는 하였으나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였음.
- 입시경쟁 구조의 최대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학생들임. 이후 학생청소년 인권신장 운동에 있어서 입시경쟁 구조 타파에 학생청소년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틀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번 수능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현 입시구조의 모순은 거의 절정에 달해 있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광범위하게 존재함. 다만, 입시경쟁의 한 복판에 있는 탓에 학생들이 이를 의식적으로 타파해 나가기란 쉽지 않음. 이런 대중적 불만을 모아낼 활동들이 필요함.
- 학생들의 의사를 조직적으로 표출하고 반영할 틀을 만들어야 함.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의사가 체계적이고 공식적으로 반영될 여지는 대단히 적으며, 이는 현재로서는 국가 교육정책에 거의 영향을 못 미치고 있음. '네티즌'이라는 형태로 불만을 표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그것이 갖는 한계는 명백함.

<참고자료> 전교조 고발장구에 학생들이 신고한 파행실태

신고란 설치일 : 3월 22일
 4월 4월27일 오전 10시 현재 1100여개 글이 올라옴.
 설치일부터 4월 22일까지만도 학교 실명을 거론하며 신고한 사례는 470여개에 이룸.

1. 파행 운영의 유형

(1) -1교시 운영

<경기도 권선고>

권선고 -1교시까지 합니다. 그리고서는 선생님들은 '우리들은 문제 될게 없다 밖에서 떠돌아봤자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0교시, -1교시때 ebs를 보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우리는 그런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교통 주는 0교시 야자 없애주세요.
 둘 다가 안된다면 0교시 하나만이라도.
 아침에 똥도 싸고 개운한 마음으로 가고 싶습니다.
 바보처럼 멍하게 학교가고 싶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 강제 실시

- 형식적인 희망 조사 (동의서, 희망원의 형태)
- 야간 자율학습을 자기주도학습이라고 말만 바꾸어 편법 운영

<경기도 수택고>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 위치한 수택고를 신고합니다
 야자희망서를 뉘주고는 "모두 동그라미 해와라"라는 말과함께 해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비희망에 동그라미를 치렀더니 상담후에 겨우했습니다.
 0교시부터 8교시까지 하는것도 짜증나는데 야자를 하는 다른 학생들은 엉덩이에 종기가 날것 같다고 합니다.
 수택고를 신고합니다!!!!!!

<경기도 하남시 남한고등학교>

작년만 해도 희망자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해왔지만 올해부터 강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항의가 들어오자 야간 자율 학습을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말만 바꿉니다.

'자율학습 희망신청서'를 배부해주지만 그것 역시 억지입니다.
 강제로 야간자율학습 희망함에 체크하고 제출하라고 옥박지르고, 기본적으로 저녁 8시 30분에 끝나지만
 최고 밤 11시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엔 등교시간이 오전 8시 30분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EBS가 등장하면서 또 저희에게만 죽으라고 몰아부칩니다.
 등교시간은 오전 7시 50분으로 변경되었으며 7시 50분에 등교해서 8시 40분까지 EBS녹화방송을 보게
 합니다.
 학교와서 잠 자는건 옳진 않지만 사람이기에 피곤합니다.
 전에는 그래도 여유시간에 잠시나마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만 놓치면 엄청난 손실이기 때문에 피곤해도 피곤하다는 기색을 못 합니다.
 게다가 정규수업후에 특기적성이란 명목으로 또 보충을 합니다.
 이것도 개별적으로 문제집을 사야하고, 전교생 모두 강제적으로 신청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속된말로 짜증납니다. 열 받습니다.
 학생이 기계도 아니고 학생이기전에 사람인데, 사람을 이렇게 발 묶어놓고 채찍질만 해대는데 과연 옳은
 것일까요.
 인문계고등학교지만 인문계학생은 하루에 3시간 자면서 지각하면 점수깎고 남들 다 잘 때 집에 보내고
 꼭 이래야되나요?
 누구나 이 시기를 거치지만,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겪으셨고, 겪는 중이시겠죠.
 하지만 정말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느낍니다.
 사교육의 부패를 줄인다면서 공교육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문제집값도 만만찮으며, 인간의 체력도
 한계가 있고, 이럴바에 차라리 사교육이 낫습니다.
 숨쉴 시간을 주길 바랍니다. 학생도 사람입니다. 1~3년만 있으면 어엿한 성인이기도 합니다.
 0교시에 EBS, 정규수업후에 강제학습, 강제자율,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강제입니다.
 글을 마치며 경기도 하남시 남한고등학교를 신고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천 중원고>

0교시 1년동안 원하지도 않는거 종이만 나눠주고서 제목은 "희망0교시선택"이면서 담임선생님이 불러
 주는거 찍어야한다면서 모두 다 똑같은 0교시를 억지로 선택하며 돈을 내고 다녔습니다. 당연히 그런건
 줄 알았습니다. 압박이 있긴 했나본지 다음달부터 선택한 과목을 듣게 한다는군요. 전교조의 힘인지는
 모르겠지만 . 어쨌든 이 일을 행하신 단체에게 감사의 뜻을 밝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강제 야간 자율 학습"입니다. 학생들이 신고할줄을 몰라서 그렇지. 거의 모든 학
 교가 강제로 야간 자율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말 못할 사정이어도 말 하지 않
 으면 야자를 안할 수 없는.. 아니. 말을 해도 빠질까 말까인 강제 야자는 정말 엄청난 고역입니다. 억지로
 시킬수록 빠져나갈 틈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를 모르는 건지.. 전혀 재능이 없는 아이들도 특하면
 "실용음악과" 간다면서 음악학원으로 야자를 빼려고 노력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도 "체대"를 간다고 태권
 도, 합기도, 유도, 검도, 등 이름만 바꾸어서 다들 강제야자를 안하려고 노력합니다.
 늦게 끝나니까 학원 못가서 사교육비가 줄은다구요? 다들 더 비싼 주말 과외, 주말 단과 다니죠.

<수원여고>

경기 수원시에 있는 수원여자 고등학교 입니다.
 뭐 들리는 소문으로는 수원시 전지역이 벌금을 물고 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수원시는 다 하고 있
 습니다.)
 아침 7시 반에 0교시 시작에 10시까지 잡아놓습니다.
 보충수업 체크하라는 동의시를 나눠줬지만 선생님은 그냥 다 하는 걸로 하고 싸인만 받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야간자율학습도 강제구요.
 고3은 11시까지 남고 휴일에도 나오니(개교기념일인데 오늘도 갔습니다. 투표날인 내일도 가고요).. 제
 발 좀 한국교육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사교육비 어찌고 하는데 이차피 하면 학교 끝나고도 학원이나 과외로 달려갑니다. 주말에도 학원 가구
 요.
 제발 학생들 상황 좀 생각해 달라구요. 네?

<경기 남양주시 진건고>

경기 남양주시 진건고도 그래요.
 강제로 자율학습 신청에 동그라미 치오라는거예요.
 그것도 두번이나 그 종일 돌렸구요.
 과로로 돌아가신 그 선생님 사건 이후로 돈 한번 더 받아갔습니다.
 강제로 동의시를 받아가는데
 담임에게 물어보면 "그냥 쳐와, 안하는사람 없어야합니다." 이 한마디 뿐이었어요.
 전 멋도모르고 모든학교들이 다이런거구나 하고 말았는데 그게.. 그런거군요.

(3) 성적우수자 특별 관리 : 특별반 편성 / 자율학습 추가 실시 / 심야 보충수업 실시

<원주 대성고등학교>

등교시간 - 6시 55분 (스쿨버스)
 0교시 수업
 보충수업 2시간
 하교시간 - 9시 30분 (야자 1교시 실시)
 *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뽑아 11시까지 추가로 자습 실시

<진광고등학교>

등교시간 - 7시 40분
 0교시 수업
 보충수업 2시간
 하교시간 - 10시 (야자 2교시 실시)
 *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뽑아 11시까지 추가로 자습 실시

<원주 고등학교>

등교시간 - 7시 40분
0교시 수업
보충수업 3시간
하교시간 - 10시 (야자 2교시 실시)
*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뽑아 11시까지 추가로 자습 실시

<원주 여자 고등학교>

등교시간 - 7시 40분
0교시 수업
보충수업 2시간
하교시간 - 10시 10분 (야자 2교시 실시)
*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뽑아 1시간 더 추가로 자습 실시

<북원여자 고등학교>

등교시간 - 7시 40분
0교시 수업
보충수업 실시
하교시간 - 10시

(4) 특기적성 시간을 보충수업으로 편법 운영

<수원 대평고>

1.0교시,야간보충수업
아침 7:10분까지 등교하고 7:20분에 0교시라는 명목에 특기적성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7교시 독서 8교시 EBS 감상
점식식사후 야자 실시 9:50분 야자 종결
2.보충·자율학습 강제실시
수원에 거의 모든 학교가 그러하듯이
0교시 체크 5과목(영어,수학,국어,과학,사회,국사) 해놓고 돈 내란다 이게 사업체지 무슨 학교겠느냐 학교에서 인간답고 존중받는 인격체가 되고 싶다
교장 교감 교사 셋이 15시간동안 의자에 앉아서 업무 보려면 불것인가?
3.불법잔조금 거출
우리 학교는 공익이라는 학교에도 불구하고 학생증값을 내라고 한다 학생당 1000원씩
본교 학생은 천명 (급식 할때 미 체크한다고?) 그전에 학부모 회비를 야자때 간식거리사준다고
10마년을 부반장 통장에 부치라고 한지도 있었다 이게 말이 되는경우인가
학교와 제공업체(책,급식,간식업체 등)끼리
손 잡고 몇몇 떠먹는거 밖에는 우리는 그렇게 볼수 밖에 없다

제발 교사와 교장 그밖에 관계 직원자들은 철쭉 들어라
좀 늦게 일어나서 늦게 등교하면 학업 능률 더 오를것이다 내가 장담한다
그리고 이땅에 잘못된 생각을 가진 교육청관계자에게 말한다 0교시 야자 한다고 무조건 좋은대학가고 나중에 편한생활하고 그런건 아니다
4.관리자(교장·교감)에 대한 관리수당 지급
두분이 얼마 더 받고 일하는지는 모른다
행정실직원한테 물어봐라

(5) 보충수업 시간에 교과진도 진행하고 정기고사에 반영, 방학 중 보충수업을 이용해 다음 학년 진도 나가기

<경기 백신고>

저희 백신고등학교는 야간 자율학습과 0교시를 강제로 시키고있으며 0교시에 문제집으로 배운것을 시험으로 낸다고
하며 그리고 어쩔땐 학교수업진도 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야간자율학습은 또한.. 부모님 동의시,학생 동의시가 나왔는데 무조건 강제로 동의함에 체크해서 가지고 오라고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땐 선생님이 부르셔서 마음대로 고치라고 강제적으로 했으므로 신고합니다.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 사우고>

파행유형
1.0교시,야간보충수업 > 지금 저희학교는 0교시에 문제집까지 사서, 학생들이 공부를 안할까봐 시험에 문제를 낸다고까지 말하고있습니다.
2.보충·자율학습 강제실시 > 수업이 끝나고 3시간동안 자율학습을 강제실시합니다.
예체능과를 빼고는 절대 빼주지않습니다.
3.관리자(교장·교감)에 대한 관리수당 지급 > 이 학교는 한반당 300만원의 돈을 걷습니다.
학생의 간식과 모의고사 비를 빼고 남은돈은 교장에게 돌아간다고 들었습니다.
EBS를 학생들이 모두 집에서 보면 서버가 불안정해서 못볼수도 있다면서
그 구실로 학생들을 학교에 잡아두려는 교육부장관..
공부안하는 학생들을 잡아놨자 공부합니까?
왜 학생들을 자유롭게 냅두지않고 어른들에게 치여사는 인형이 되야하는지 참..

<경기 안양고>

안양고등학교 신고합니다.
아침 자율학습(0교시), 9교시, 게다가 야간 자율학습. 어이없습니다.
자율학습 신청서에 여러 항목이 있는데, 담임들이 정해줍니다.
'니들은 다른거 볼거 없고 *번 보이지? 그거 숫자 쓰고 동의에다가 동그라미 쳐라.'
분명 안내문에 부모님과 상의후에 하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 가정통신문을 학교에서 처리하다뇨.
 무슨 학교통신문이나 학교 설문조사도 아니고..
 그리고 야간자율학습, 아침 자율학습 다 좋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은 그렇다치고, 아침 자율학습.. + 9교시.
 진도 나간다더군요. -_-
 수업료도 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1학년은 신입이라 8시 30분에 보내더군요. -_-
 2~3학년이요?
 10시까지 시킵니다. -_- (물론 강제죠.)
 게다가 급식업체는 항상 두레입니다. 뭐 비리인지.. 더 좋은 회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방학때요?
 말도 마세요. 방학..
 제가 마지막으로 맞이한 방학. 30일이더군요. -_-
 그중 20일.. 학교 나가서 4교시.. 수업했습니다.
 다음 학년 진도 나간다는데 어쩍니까? 더러워도 나가야지..
 4교시 이후에 뭐했나구요? 자체적으로 담임이 주도하는 자율학습 했습니다. -_-
 이게 방학인지.. 방학이 아닌지 구별이 안되더군요.
 이런 학교 다녀야 됩니까?
 이게 무슨 얼어죽을 명문인지 원..(지금은 명문도 아니지만) 나라 교육 다 망했네.

(6) 토요일 오후 및 공휴일 자율학습 실시

<경기도 안산 초지고>

안산 초지고 고3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0교시는 물론 야간에 10시 30분까지 강제로 야자를 하고 있습니다.
 야자를 안하면 수지도 안써주고 나중에 정시 원서도 안써준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누가 야자를 뺄수 있겠습니까?
 또한 일요일도 의무적으로 학교를 가야하고 토요일도 오후 늦게까지 남아야합니다.
 안산은 비평준화 지역이고 우리학교는 그 중에서도 약간 처지는 학교라서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님, 바로잡아주세요.
 전교조 선생님들, 바로잡아주세요.
 공립고등학교에서 이런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투표일인 4월15일도 강제로 학교에갑니다.

<속초고>

특기적성이라는 이름의 보충은 당연한거고..... 거의 정규수업화되어있어서.. 저시간에 병원갈때도 외출
 증같은거 받아야한다죠...ㅋㅋ..... 야자는 3학년은 11시까지..1,2학년은 10시까지.... 불참써넣어도 결국



하게되고..ㅋㅋ 추석이건 뭐건... 빨간날에도 학교 가야하고..(내일도 역시) 일요일도~ 토요일도~ 자율
 학습하고.....ㅋㅋ... 요새는 교육부의 ebs돈놀이로 학교에 명분까지 생겨버렸네요..주말에 ebs방영해주는
 거...ㅋㅋ 하지만....100%강제라는게 문제죠..

<강릉 명륜고>

강원도 강릉시에 소재한 강릉 명륜 고등학교..
 아침 0교시..
 오후엔 특기적성수업 이란 이름하에 교과목 수업..
 밤엔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야간'자율'학습..
 토요일에도 강제적인 자습..(3학년)
 일요일&공휴일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강제' 시행하는 '자율학습'..
 지린 내일도 학교 갑니다.
 방학때 3일 쉬다는군요. 진도나간다는데 어찌겠습니까, 나가야죠

<철원고>

그래도 1,2 학년때는 10일은 쉬었는데 말이죠(방학인가요?)
 고3이무슨! 무조건 동그라미이러던데요,무슨 고3이 기권줄아나봐요,그리구 더 이해안가는건요.공휴일
 (빨간날)에도 자율학습시킵니다.개교기념일에도 나와서했구요,식목일날도 나와서 강제로했구요,내일선
 거날인데 학교쉬거든요,근데 고3이라는이유만으로 강제로나와서또시키구 앞으로도 공휴일 계속강제로
 시킨다는데요,내일선거하면 사람들 다학교와서 투표하는데 시끄러운데도 나와서 하라네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그럼 고3은 전혀쉬지말란말인가..진짜 하루웬종일 의자에앉아있으면 장난아니게 몸망가져요.일
 요일날 운동장에서는 사람들많이몰려와서 시끄럽게 축구등등하고하는데 시끄러워죽겠는데도 일요일날
 나와서 몰하라라는건지..

(7) EBS 시청료, 불법 찬조금 등 각종 잡부금 징수

<경기도 시흥시 정왕고>

아 정말 싫습니다
 학부모 회의때 20~30만원씩 걸으면서...이거 내면 애 상 많이준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7시반 등교해서
 7:40~8:30 -0교시
 8:30~9:00 -청소
 9:00~9:50 - 1교시
 10:00~10:50 - 2교시
 11:00~11:50 - 3교시
 12:00~12:50 - 4교시
 12:50~13:50 - 점심시간

13:50~14:40 - 5교시
14:50~15:40 - 6교시
15:40~16:00 - 정소
16:00~16:50 - 7교시
17:00~17:50 - 8교시
17:50~18:30 - 저녁시간
18:30~20:00 - 9교시
20:10~21:00 - 10교시

이게 학교 일과입니다...
0교시와 8교시에는 특기적성이라는 명목으로 31400원씩 걷어갑니다...
애들이 안하면 안되요?라고 해도...선생이 질차상 해야한다며 강제로 0표시 합니다...
다해야 한다며.....정말 미치겠습니다
0교시때 애들 다 엎어잡니다.....
그리고 9교시때는 강제로 ebs들어놓고 공부하라고 합니다..
애들은 할말이 없는데 강제로 시키니..죽을맛입니다.....
살려주세요...
경기도 시흥시 시화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정왕고등학교입니다.

<부천 소사고>

부천의 소사고등학교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학부모 총회를 다녀와서 좀 지나보니 학부모에게 전화가 왔습
다..
각 반마다 130만원씩 걷어야 한다구요..
아이 학교 학급 계산을 해보니 6천 만원이 넘는 돈입니다.
학부모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학교에 기부하는건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각반에 할당량을 정해주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아이 학교만 이런건지..
혹시 다른학교도 이런가요?
0교시 야자 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기 같은데 이런일은 말이 없는거 같아서요
걷는돈이 아이들에게 쓰이면 말을 안하겠는데 출처도 불분명하고 이번달말까지 내라고 했다 합니다
안건히는 반 아이 엄마를 교감선생님께서 부르셨다고도 하구요..
아이 선생님들께 제가 연락을 드려왔었는데 하나같이 모른다고 하시네요
학부모측에서 하는거 같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안산 송호고>

여기에 글을 올리겠다고 교육부가 얼마나 반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지를 비롯한 제 친구들이아직까지도 학교에 적응을못한단 소리일지도모르겠네요ㅎ

즐거운 마음으로 야자에 입하는 학생이 얼마나 있을까요 ^ ^
아니, 야간 자율 학습이 아닌 자율학습을 말씀드리는겁니다.
우선 0교시,야간보충수업..
전 처음 고등학교에 입학했을때 0교시라는건 당연한건줄알았어요 ^ ^!!!ㅋㅋ
그런데 예전 한 TV프로그램에서 0교시 폐지를 의치더군요.
처음 2주?그동안은 등교시간 7시40분,야간타을학습은 9시 50분까지.
명목상이죠 ^ ^당.연.히, 등교시간은 30분으로 줄어들었고, 자율학습은 10시로 늘어났습니다.
교칙도 참으로 웃기지도 않지만 여긴 그게 아니니 접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 보충,자율학습 강제실시.
0교시와 8교시를 합쳐 보충수업이라합니다. 당연히 문제집도 사고요,
물론 강.제.로. 돈내구요 ^ ^ 강.제.로.해요 ^ ^
담임선생님께서 무조건 동그라미쳐오라고하십니다.
우리의 의사는 없구요, 그 종이하나가 우리가 찬성했다는 증거로 나가게 되죠
아침엔 다 꾸벅꾸벅 졸아요,하나마나죠, 교육부장관님은 뉴스도안보셨나봐 ^ ^
그리고 불법찬조금,ㅎ
이건 .. ^ ^zㅋ지회학교,ㅎ 에어컨있구요, 커튼 다있어요 ^ ^
학교에서 불법찬조금 신고 뭐 이찌구 프린트를 나눠받았는데요
불과 이틀후에 집에 전화가왔습니다.
에어컨과 커튼을 해야한다며 10만원을 내라네요? ^ ^
친절하게 계좌번호까지 불러주십니다.ㅎㅎㅎㅎㅎㅎㅎㅎ
학교는 그 가정통신문으로 빠져나갈수있겠죠..
그쵸, 송호고? ^ ^
그리고 아직은 교장,교감이 돈받는게 있는지 아닌지는 잘모르겠네요ㅎ
혹시알아요? 과제쳐보면 더있을지두 ^ ^ㅋㅋ
빨리자야겠네요 ^ ^ㅋ
내일은 체력보충좀해야죠 ㅎ,
학교에서 15시간을 버티려면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 사우고>

파행유형
1.0교시,야간보충수업 > 지금 지회학교는 0교시엔 문제집까지 사서, 학생들이 공부를 안할까봐 시험
에 문제를 낸다고까지 말하고있습니다.
2.보충o자율학습 강제실시 > 수업이 끝나고 3시간동안 자율학습을 강제실시합니다.
예체능과를 빼고는 절대 빼주지않습니다.
3.관리자(교장o교감)에 대한 관리수당 지급 > 이 학교는 한반당 300만원의 돈을 걷습니다.
학생의 간식과 모의고사 비를 빼고 남은돈은 교장에게 돌아간다고 들었습니다.
EBS를 학생들이 모두 집에서 보면 시비가 불안정해서 못볼수도 있다면서
그 구실로 학생들을 학교에 잡아두려는 교육부장관...

공부안하는 학생들을 잡아놨자 공부합니까?
왜 학생들을 자유롭게 놔두지않고 어른들에게 치여사는 인형이 되어하는지 참..

<수원고>

저희 학교에서는 명분이라는 이름 하나로 학생들에게 강제로 보충학습,야간자율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고싶지 않거나 정말 피곤한 학생들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 집어넣어 강제로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보충학습 희망신청서를 나눠줬는데 반대 할까봐 아예 신청서를 나눠주면서 그 자리에서 작성하라 그러더군요.신청 안하려면 자퇴하라고 합니다. 입학하기전에도 적응훈련이다 뭐라 해서 그때부터 학생 패면서 강제자습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겉으로는 면학분위기 조성,학생들의 자율 존중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안으로는 학생들에게 돈을 왕창 뜯어갑니다. 선배 수시 도장값 :5,000원,보충수업비(그냥 문제집 풀어주는것. 답안지와 다름.바가 없음.):거의 2만원 정도 ,또 학부모님에게도 십만원씩 뜯어갔습니다. 정말 무서운 학교입니다. 학교다니는 돈이 학원보다 더 비쌉니다. 야자를 안시키면 차라리 마음먹은 학생들은 편안히 공부라도 하지 학교에서 공포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야자를 할 수 있습니까? 도와주세요

(8) 부교재 선정, 강제적 구매

<경기도 안법고>

안법고등학교는 0교시, 반강제 보충수업을 충실히 행해오고 있습니다.
0교시는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모두가 반수면상태에서 0교시를 보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집에서 자는게 더 이익이죠..
또 보충수업을 하고있는데.. 그것도 반강제적입니다..학교에서 반대를 못하게 분위기를 조성하죠..
물론 동의서를 돌리긴 하지만.. 반대했다간 무슨일이벌어질지 몰라 모두들 동의하죠..
사실 보충수업..별로 소용없는것 같습니다..
보충시간엔 다른교재로 수업을 나가는데..일주일에 별로 안들어서 수업의 밀도가 떨어지죠..
아.. 덧붙여 말하건데.. 정부가 제시한 교육방송정책은 정말 학생들 피말리는 것입니다..
아직 저희학교에선 이런현상이 없지만..분명 수능에 교육방송이 나온다고 시험범위에
교육방송교재를 집어넣어버리는 학교가 나올테니까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보충수업은 둘째치고 0교시 좀 없애주세요..
일부 선생님들은 어짜피 0교시 없어봐야 애들 조는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짜피 0교시 해봐야 거의 수면상태로 보내는데..
아무래도 집에서 편히 조금이라도 더 자고오는게 좋죠..
정말..0교시 좀 없애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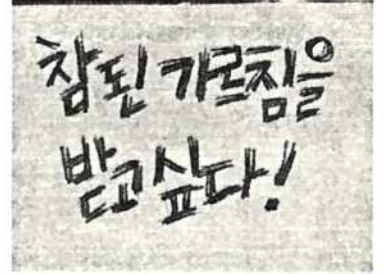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 노현성 | 인천외고 파면 철회 학생대책위원장

1. 인천외고 분규 진행 과정

□ 분규 전

- 2003년 3월 현 이남정 교장 부임
- 부임이후부터 교사, 학생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 통행 식으로 파행적이고 독선적인 학사를 운영하기 시작함
- 파면 당한 두 선생님을 비롯하여 많은 전교조 선생님들이 학교장의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학교 운영과 학생들의 인권 침해, 교권 탄압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와 진정한 학교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하셨음
- 그러나 성적지상주의라는 편향된 교육철학과 전교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학교장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많은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며 학습권을 비롯하여 인권까지 침해함.
- 학생들의 의견이나 교사들의 의견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독단적인 운영으로 생활선도규정제정을 비롯하여 유급제도 성적에따른 시설물 차등이용 단발령 별점제도를 실시함.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생님께 경고장으로 대답
- 결국 학내민주화와 학생의 인권을 보호를 위해 가장 앞장서서 나섰던 이주용 박준배 선생님이 파면되고 이를 4월 24일 통보함



□ 분규 후

- 4월 26일, 두 선생님의 파면소식을 듣고 전교생이 교장실 앞에서 항의함. 몇몇 학생들이 교장과 면담. 학교장 "더 좋은 선생 뽑겠다."
- 이를 시작으로 교사 학부모 학생 졸업생 대책위가 구성되고 부당파면철회와 학내민주화를 위한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 제학생 부당파면탄원서에 831명 서명, 점심집회시작, 2번에 걸친 대규모촛불시위(제학생 700여명 참여), 교문 앞 집회, 3번에 걸친 요구안 전달 까지 모두 목살됨.

- 학교측에선 아무런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음 40여일이 지난.
- 학교장은 학내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며 학부모와 교사, 학생간의 갈등을 조장함.
- 6월 5일, 학생대책위 회의에서 '진번수업거부결정'
- 6월7일 재학생 진번수업거부, 650여명 참여. 학교장에게 사태에 대해 항의하였지만 학교장은 미봉책으로 6월 7일~12일까지 휴교령.
- 6월 14일 휴업령 후 수업 재개하는 날이나 학생 2차 수업거부가 25일까지 계속됨. 이후 본교국회 의원 방문, 교육청 특별감사 실시. 계속되는 항의에도 학교와 재단 측에서는 묵묵부답.
- 6월 30일 이사장 교육감 전교조인전지부장의 사태해결을 위한 3자협상이 있었지만 이사장의 무성의한 태도로 결렬되고 이에 격분한 학생들이 7월 1일부터 또다시 수업거부에 들어가고 교육청 재단에 수백 여 명의 학생들이 직접 찾아가 항의했지만 어떠한 대답이나 해결책도 들을 수 없었음. 학생들의 피해를 날로 커져감.
- 학생대표들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고 삭발식, 삼보일배 등 사태해결과 학내민주화를 위하여 학생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함.
- 아무런 해결책 없이 하계방학. 7월 21일 교육청에서 학교장의해임을 재단에 권고함.
- 학생대책위 학생들은 방학을 반납하고 학내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함. 개학 이후 전교생 학교장 퇴진 서명운동을 실시. 교육감에게 제출함.
- 8월 31일 재단이사회에서 이남정 학교장을 같은 재단에 있는 명신여고로 전보조치함. 9월 1일 새로운 김영복 학교장 취임으로 사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지만 이주용, 박춘배, 이상발 선생님이 업무방해 형사고발로 인하여 구속되심. 학생들 이에 탄원서 서명과 방과 후 경찰서 앞에 모여 항의함.
- 9월 9일 이주용 박춘배 이상발 선생님 석방. 11월 19일 지노위에서 이주용 박춘배 선생님 복직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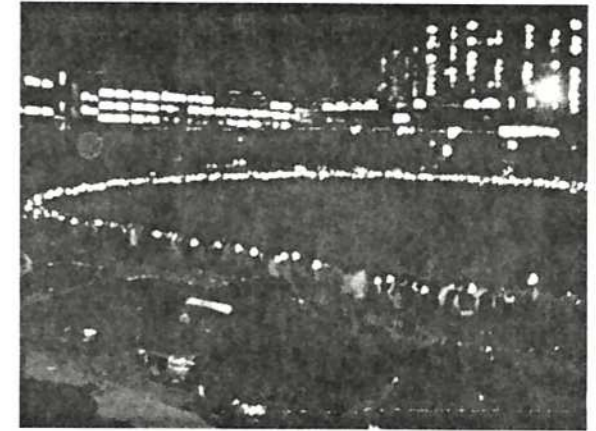
□ 현재

- 학생들의 인권을 억압하던 탄발령 성적순 시설물차별이용 벌점제도 유급제도가 모두 폐지됨. 우열반은 아직 존재하지만 내년에 폐지.
- 현재까지(12월 21일) 두 선생님의 복직이 안 됨.
- 일부 비 노조 선생님들의 시위참여자라 비참여자에 대한 차별이 생김.
- 학내사태동안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결과치리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 있음.
- 예전과는 다르게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려 하지만 많이 부족함. 얼마 전에 한 생활규정개정에 대한 건도 슬그머니 넘김. 학생회 또한 집행부 기능을 잃음.

2. 느낀점

□ 사립학교 법 개정 및 사학 분류시 제도적 보안 절실 필요

이 운동을 하면서 가장 문제라고 느꼈던 부분은이다. 현재 사립학교 법으로는 실질적인 모든 권한이 재단에 있기에 정말 이 운동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우리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 인사권이 모두 재단에 있어서 발생한 예라고 생각된다. 그곳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도 재단에서 발령을 내리면 수 백명의 학생을 책임지는 교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립학교 법의 가장 큰 문제라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 사학 분류시에 그것을 중재해줄 수 있는 아무런 제도나 기관이 없다. 결국 모든 피해는 학생들이 고스란히 지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5월14일 저녁 '교사 파면 철화·민주적 학사 운영'을 요구하는 촛불시위

□ 학생의 인권이 무시되고 학생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는 학교

우리학교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남정 교장의 독선적인 학사운영 있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우리학교 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전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고 학생의 의견 같은 것은 전혀 수용이 되고 있지 않다. '학생은 공부만 하여야 한다.' '학생이면 선생님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지 무슨 인권이야'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이며, 엄연히 인권이 보장되는 국가이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인재양성을 하는 학교에서 조차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진다면 어찌 학교라 할 수 있겠는가? 이 잘못된 생각을 깨몽시키는 사회적인 노력이 없다면 이러한 일은 영원히 계속 될기라 생각된다.

3. 교훈점

□ 민주적 비폭력 합법적 이 세 가지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겨도 이기지 못하는 운동이 된다.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깨달은 교훈이다. 시위를 하다보면 민주화를 외치면서도 가끔 자기 조직 내에서도조차 민주적인 질서가 무시되는 모습이 생긴다. 이런 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면 동력도 떨어질 뿐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운동에 대한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민주적인 운동이 아주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비폭력이다. 민주화운동을 하다보면 상대방의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에 의해서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가 생긴다. 결국 폭력적인 시위가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역시 위에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감이 생기고 운동의 의미가 퇴색된다. 간디가 위대한 이유가 뭐가? 간디는 비폭력적이었기에 위대한 것이다.

세 번째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합법적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또 법치국가이다. 엄연히 실증법을 위반하는 운동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내가 아무리 정의롭다고 싸운다 해도 실증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쉽게 말하자면 이기도 이기지 못하는 운동이 된다.

위에 세가지만 명심하고 민주화운동을 한다면 분명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믿는다.

□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학교에서 인권탄압적인 억압을 받고 잘못된 학사운명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는다면 이걸 학생의 탓이다.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잘못되었다고 느낀다면 자기의 주장을 소신껏 말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잘못된 것을 누가 해주길 바라지 말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강요나 명령에 의해서도 움직이지 말라.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청소년 운동이다.



[보도기사] 서울신문

고3으로서의 심정

허윤경(인천외고 3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외고 3학년 허윤경 학생입니다.

저는 그다지 공부를 잘하지도 않고, 남들보다 재능이 우수한 학생도 아닌 평범한 고3입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이번 사태가 일어난 이후로, 남들보다 더 많이 뛰려고 노력도 했고, 선생님들과 함께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매일같이 밤늦게까지 남아서 학교지킴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고3이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 하는 질문을 던지실 때마다 전 때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야 6개월 참고 나몰라라 하다 나가면 그만이지만, 저희 뒤를 이을 후배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학교는 저희 모교입니다. 저의 모교가 옳지 못한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모습 보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 일이 일어난 후로 학생들은 어른들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고, 세상을 뻔뻔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배웠습니다.

아직, 옳은것만 보고 좋은것만 배워도 모자란 성인-1의 나이에 저희들은 그렇게 어른들에 대해 상처입고, 가슴 아파 하고 있습니다. 매년 목이 매일매일 울어도 보고, 매년 대화를 요청하며 악을 질러봐도 저희를 뒷전한테 외면해 버리는 교장선생님의 그러한 모습을 볼때마다 저 사람이 과연 선생님인가싶을 정도로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나아질 조짐은 보이지 않고, 악화 되어만 가는 학교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학생들은 회의결과 "전면수업거부"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고3인 저와 제 친구들도 많이 망설이긴 했지만,

학교를 위해서 모두 뒷전하고, 이번 일에 뛰어들게 된 것이었지요..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제 친구는 음악을 전공합니다. 목소리가 생명인 친구이지만, 이번 일에 대해 확실히 잘못되었고 학교의 주인으로서 엄연히 목소리 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목소리도 같은 음악을 포기하고 이리저리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시행한 수업거부 그 후엔 휴교령과, 1학년 학부모의 욕설과 손찌검.

6월 8일인가? 화요일 저녁, 그 상황은 말씀 드리지 않아도 웬만큼 아시리라 믿고 지면상 생략하겠습니다. 그 상황에 열댓명의 학생중에 저도 있었고, 맞은 학생 중 한 사람입니다. 전 울면서 미친듯이 학부모님들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학생들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줄수 있냐고, 이게 쓰레기로 밖에 안 보이냐고.. 그런 저희들을 보며 '애네 완전 싸이코 아니냐'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욕설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을 보며 고3을 뒷전하고 이일에 뛰어들 저희들은 답답한 눈물밖에 흘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학생이라면 학생의 본분을 다해야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학생들에게.. 사회에 나가서야 겪을 일을 일찍이 경험시키고, 마음 속 깊이 상처를 낸 어른들이 먼저 책임지고 다가서서 사과해야 하는게 옳은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어른들 일이니 신경쓰지말고 너는 공부나 해라.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른들 일이기 전에 저희들 과도 관련된 일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교장선생님의 독선적 학사운영에 맞서 여러번 항의를 했지만 이번

박탈당한 우리의 정치참여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 - 18세선거권운동

- 신정현 | 18세선거권낙추기공동대표

히 부식당하고 지금까지 왔고, 힘이 무너지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잠잠해질 참나, 저희들을 위해 목소리 내고 싸워주시던 선생님 두분이 과면을 당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따르고 존경하시던 두분의 과면을 인정할수 없었으며, 지포한 짓날 쓰러질 정도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과연 어른들만 관련된 일일까요? 그렇게 따지자면.. 학교의 일인데 왜 교장선생님께서 외부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더 크게 크게 부각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교장선생님께서 두분 선생님의 과면을 철회시키고, 퇴진하신다면.. 학교는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정상화가 될때까지는 초초한 고3이지만은, 절대 학업에 전념할수 없고, 미래를 망치는 한이 있더라도, 어리석은 선택이었다해도 끝까지 싸울것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고3이라는 체제 안에 많이 눈치도 보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고3을 위해서라도,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학교를 사랑한다면 교장선생님으로써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3보다 고1이 중시되는 학교.

과연 어느 학교에서도 볼 수 없던 광경입니다. 정말 학교에서 떠나야 할 사람은 떠나지 않고, 정작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뒤로한 채, 쓰린 마음으로 눈물을 머금고 학교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도 많은 후배들을 잃었고, 그로인해 많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또, 얼마나 힘들었으면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교장선생님에 대한 원망은 커져만 가고 있구요..

대화와 타협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던 이번 사태에 대해.. 교장선생님께선 법으로 하면 다 해결 된다는 말씀만 되풀이 하십니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법이면 다 해결되는 세상이지만, 법이라도 옳지 못하다면 언제든지 수정해야 하고, 어떠한 사건에 대해 잘못된 것 같다는 명분이 확실하 선다면, 자신들이 가진 생각에 대해 의사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교장선생님과, 기성세대의 고지식한 틀에 박힌 사고방식이나 선입견을 버리고, 과연 학생들이 원하는것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울부짖는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어리지만, 옳고 그른것은 분명히 알 나이는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서 모르는것이 아니라, 어리기 때문에 거짓과 진실은 확실히 구분해 낼수 있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아직 순수한 나이기 때문에 저희는 보여지는 모든것을 거짓없이 말씀드릴 수 있구요.

어린 학생들 마음에.. 잔혹한 상처만을 입히는 교장선생님.. 저희가 그토록 존경하고 따르던 두분 선생님에게.. 다시는 지워질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 그리고 과면이라는 극단적 경계를 내린 교장선생님께서는 입장을 바꿔서 저희를 한번이라도 이해해보려 하셨다면, 가슴 속 깊이 와닿는 것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고3 수험생여러분! 이제 수능이 15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겠지만, 이 디운 날씨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수험생 분들을 생각하며 응원의 말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세요!

1. 18세 운동 경과

시기	활동 내용
1995년 6월	진보정당추진위원회,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 소송
1995년 12월	경실련, 전국연합 등 5개 시민사회단체, 선거연령하향화 주장(18세)
1996년 3월	충북지구대학총학생회연합, "낭랑 18세 운동" 전개
1996년 3월	서울대이화여대 신입생 14명, 직장인 1명 등 총 15명 헌법소원 제기
1996년 4월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 헌법소원심판 청구
1997년 3월	대학생유권자위원회, 선거연령 18세 주장
1997년 6월	1차 선거연령 인하 헌법소원 기각
1999년 4월	경실련, 선거연령 19세로 낮출 것을 포함한 정치법안개정안 입법청원
1999년 5월	청협 주최 '청소년대토론회' 참가 청소년이 선거권 18세 하향조정 제안 청소년연대준비위원회(문화부 청소년위원회 회장 외), 18살 참정권허용운동 준비
2000년 4월	2차 선거연령 인하 헌법소원 각하
2001년 6월	3차 선거연령 인하 헌법소원 기각
2002년 4월	4차 선거연령 인하 헌법소원 기각
2002년 5월	문화연대, 사회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정치참여 토론회 개최
2002년 12월	낙추자 대선 모의투표 실시 아이두 청소년선거권획득 온라인 서명운동, 온라인 대선모의투표 실시
2003년 5월	민주노동당 제1회 18세 정치적 성년 선포식 개최
2003년 8월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개최
2003년 11월	5차 선거연령 인하 헌법소원 기각
2004년 2월	민주노동당 청소년당원들, 18세 선거연령 인하 요구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정치개혁대학생연대, 유니보터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참여연대 등 12개 단체, 19세 투표권 요구 기자회견
2004년 3월	민주노동당 학생당원, 피선거연령 인하 헌법소원 제출 및 기자회견
2004년 4월	낙추자 선거인단 모집, 총선 모의투표 실시 청소년정치참여네트워크 청소년 유권자 축제 개최, 고양시4개 선거구 온라인 모의투표 실시
2004년 5월	민주노동당 제2회 18세 정치적 성년 선포식 개최 <18세선거권낙추기청소년연대 결성>, 국회앞1인시위 및 광화문 180만 서명운동 전개, 민주노

	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면담, 17대국회 국민청원1호로 "선거연령하향(18세)조정에 관한 청원" 제출(소개의원: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
2004년 6월	<18세선거권낮추기청소년연대>, <18세선거권낮추기공동연대>로 개칭, 연대의 범위를 청소년 단체, 정당, 시민단체로 확대함.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청소년실태 거리캠페인 진행, 서울시난장 참여(18세 선거권 홍보)
2004년 8월	열린우리당사 앞 집결 및 농성, 국회의원 회관 내 18세 선거권의 위한 토론회 개최(국회의원 및 보좌관 대상)
2004년 9월	18세 선거권 낮추기 대토론회(고려대), 국회의원 대상 서명운동 개시
2004년 10월	<Festival for 18s> 문화축제 개최(일산 라페스타), 대학로 마로니에 거리 축제 및 서명운동 진행(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회의 주관)
2004년 11월	국회 보좌관 면담 및 서명운동 진행(11월현재 122명 서명), 국회의사당 앞 기자회견 개최.



2. 평가 및 교훈점

“19세로 된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서명운동을 하면서 정말 가지각색의 반응을 보았다.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 많은 이슈를 다루고 조사해야 하는 보좌관들조차 선거법과 민법의 나이를 헷갈려 하는 모습이 보였다. 어떤 분은 선거권이 이미 19세가 된 것이 아니냐며 따지기도 하셨다. 그 동안 온갖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국민청원, 의원발의에도 불구하고 입법부 당사자들조차 너무나 무지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보수층을 향한 18세 선거권 논리, 어떻게 볼 것인가?”

18세 선거권에 대한 논의는 자칫 나이의 개념에 국한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발견했다. 18세를 이해 시키기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18세의 대다수가 대학생이라는 사실을 강조함에 있어 보수층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18세선거권을 관철시킬 합리적인 방법을 택했다고 하지만 이는 우리 스스로가 18세 이하의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다.

우리 스스로도 기성세대 보수층을 겨냥한 논리와 청소년의 정치참여의 합당함을 주장하는 논리를 양분화하여 설득한다. 이로 인해 보수층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양극단에 대한 지혜로운 접근이 가능하였지만 이것은 자칫 우리 스스로가 양비론적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다.

“누구를 위한 선거권인가?”

18세로 선거권을 낮추는 운동을 단지 18세라는 나이의 개념보다는 청소년의 정치참여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상징한다.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가의 위기 극복과 역사의 진보에 앞장섰던 이들이 바로 청소년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항쟁 그리고 셀 수 없는 민주화 투쟁의 중심에는 청소년이 있었다. 청소년의 국가와 역사에 대한 순수한 열정은 한국정치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정치의 투쟁과 진보의 주체였던 청소년은 더 이상 정치라는 것과 결코 어울릴 수 없는 단어가 되었다. 언제부터인지 기성세대는 국민에 대한 정치참여라는 민주주의의 핵심개념을 청소년에게 금기사항으로 규정지었다. 이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을 교육함에 있어 그들의 정치참여 정신을 거세하는 것이었다. 매년 70만명의 청소년들이 오로지 대학이라는 한가지 목표만을 위해 살아가도록 교육받았고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정치는 대학을 가는데 방해가 되고 순수한 청

소년들을 더럽힐 수 있는 추잡한 개념으로 세뇌된 것이다. 21세기의 청소년들의 머리 속에는 순수한 열정에 가득찬 역사의식과 사명의식대신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기 위한 공식과 드라마, 가요 등의 대중문화가 자리잡았다.

지난 6개월의 시간동안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적, 의식적 개혁운동을 펼쳐오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가장 큰 산은 청소년에게 공부가 다라고 가르치는 기성세대가 아니라 바로 이부린 역사의식도, 사명의식도 없이 사는데 길들여진 청소년,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 이제껏 활동의 90%를 정치권을 선포하며 언론에 대해 홍보하는데 열중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에게 정치에 참여할 논리와 근거가 있음에도 그것에 참여할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의 의식을 일깨워 주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18세 선거권 낮추기 운동이 성공한다면 과연 청소년들이 기뻐하며 반겨줄 것인가? 난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을 한다. 난 청소년들의 동의와 지지가 기반이 되지 못한 18세 선거권은 반쪽이라고 생각한다. 효순이, 미선이 사건 때와 같이 전국의 청소년이 스스로 쫓붙로 하나가 되었듯이 박탈당한 우리의 정치참여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아 열어두는 역할이 바로 우리 연대가 할 일이며 그것이 진정으로 청소년을 위한 18세선거권운동이라 생각한다.

[성명서] 74들 학생의날 맞이 기자회견

광주학생운동의 주역 -
18세에게 선거권을!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18세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으로서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국가로부터 마땅히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18세 청소년은 지금까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선거권이 없는 것은 모순이다.

1970년대를 전후로 이미 미국, 독일, 필리핀, 태국 등 93개국이나 되는 나라에서 18세 선거권이 주어졌다. 우리가 선거연령을 19세로 낮추는 논의를 진행중인데 반해 세계는 이미 선거연령을 16세까지 낮추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18세의 피선거권으로 인해 19세 국회의원이 탄생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18세 선거권 부여는 많이 늦었지만 필히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3·1운동, 광주학생운동, 4·19혁명 등 이 땅의 독립과 민주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섰다.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투쟁하며 목숨을 잃었던 청소년들을 명확한 근거없이 미성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에서 배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오늘 이 자리는 18세 청소년의 선거권이 이미 받았어야 할 지극히 마땅한 권리임을 알리고 정중히 요구하는 자리이다.

우리는 청소년들의 열망과 기대를 모아 2004년 5월 31일, <선거연령 하향(만18세)조정에 관한 청원>을 17대 국회 1호 청원으로 접수했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반드시 18세 선거권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17대 총선에서 18세 선거권 공약을 내걸었던 여·야당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유념하고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18세 선거권 관철을 위해 청소년들뿐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뜻을 같이 하는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국회의원들과 함께 전력을 다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2004년 11월 3일
18세 선거권 낮추기 공동연대

학교 내 종교의 자유와 학생의 인권

- 강의석 | 대광고 학생회장

대한민국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는가?

대한민국 헌법은 '예.'라고 답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소재한 미션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는가?"

배움의 공간이 학교에서는 '아니요.'라고 답하고 있다.

나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다.

"대한민국에 소재한 미션스쿨(종교재단사립학교를 의미함)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한민국 국민인가?"

서울에 살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연말에 고등학교에 배정받기 위한 원서를 작성한다. 그 원서에는 자신의 이름, 주소, 성적 등등을 기입하며, 자신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도 기입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아파트 3동에 살고 있는 천수는 불교 재단 학교에 배정되며, 같은 아파트 4동에 살고 있는 보아는 기독교 재단 학교에 배정된다. 천수는 크리스천이고, 보아는 무교이다.

불교 재단 학교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기독교 재단 학교에 입학하게 된 보아의 학교생활을 들여다보자. 보아는 입학할 때 특정 종교 교육을 잘 받았다는 선서를 하게 되거나, 서약을 하게 된다. 선서를 할 때 대부분의 학생이 내용도 보지 못하고 신입생 대표가 선서를 외치니까 손을 들게 된다. 서약의 내용에는 특정 종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퇴학을 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학교도 있다.

입학식은 특정 종교 의식과 함께 진행되며, 그 다음날부터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게 된다. 특정 종교의 노래를 부르고, 경전을 읽고, 번호 순으로 돌아가며 대표 기도를 드린다. 기도를 드리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왜 하지 않느냐?'는 대답이 돌아온다. 종교 의식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매주 1시간씩 강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된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종교 구절을 외워야 한다. 이 시간엔 매주 돌아가는 반별 성가합창도 있다. 3박 4일간의 수련회에도 종교 의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모든 프로그램을 하기에 앞서 예배를 드리며, 특정 종교의 절대자를 따라 행동하겠다는 생활수칙을 외워야 한다. 매주 1시간씩 종교 수업을 받기도 하는데, 선택권이 없이 특정 종교 과목 한가지만을 이수하게 되어있다. 그 수업시간에는 다양한 종교에 대해서 공부하기도 하지만, 대부! 분 특정 종교 경전을 읽거나, 특정 종교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된다. 또한 특정 종교 구절을 적어오는 과제를 수행해야 하기도 한다.

제도적으로 학생들이 교회에 나가도록 강요받는 경우도 있다. 모든 학교가 그렇듯이 학급마다 회장과

부회장이 있는데, 부회장의 명칭이 종교부장이다.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출석해야 하며, 당선되면 종교 의식을 담당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회장이 되고 싶은 학생들도 출마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는 한편, 부회장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학생들이 생기기도 한다. 학생회 임원의 선출 규정에도 그런 것이 있다. 학생회장과 부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규정에 '교회에 출석하는 자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들은 이로 인해 출마를 포기하게 되거나, 출마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학생도 있다. 여기서는 부정적인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힌 것 같다. 종교를 강요하는 것과,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를 수단으로! 여기게 하는 것.

"권리 위에 잡지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법치주의 국가의 근본이념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말이다. 하지만 권리를 배우지 못하고, 의무만을 강요받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아래와 같은 말이 어울린다.

"권리를 배우려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조직 속에 속하게 되면 두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조직의 문화 속에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이며 그 문화에 길들여지는 것이다. 학교에 교육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가르침을 받는 이들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 그것은 선택권으로 주어진다. 선택권이 없다면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떠한가? 그들에게 자율적인 선택권이 보장되는가? 그렇지 않다. 보충수업 참가여부, 교과목의 선택, 교복 등등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선택권은 보장되지 못한다. 그런 환경에서 우리들은 '어떤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의 집합인 교칙으로 두발상태와 용의복장을 규제받고, 별다른 잘못이 없어도 무자비하게 체벌-골프채로 맞기도 한다-을 당하기도 하며,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는 말에 묻혀 그런 것들에 대해 순종해버리고 있다. 심한 말로 한다면, '무비판적인 순종이 미덕이다.'라는 문화에 세뇌되고 있다. 하이데기가 형이상학의 근본 개념에서 지적했듯이 당신이 한 모임에 직접 '참가'한다면 그 모임의 의기양양하거나 의기소침한 분위기를 공유하게 될 것이며, 그것에 저항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교 내에서 종교의식이 강제적으로 행해지고 그것에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반항아이며 옳지 못한 학생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것이 학생들의 선택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과정을 차근차근 살펴보자. 미션스쿨에 입학하고 나서 특정 종교 의식을 강요받는 것에 대해 어이없다며 불만을 토로하던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용해진다. 비판한다고 해서 바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이다. 종교 의식을 거부하려는 그들에게, '그래, 너희들의 종교도 보장한다. 하지만 건학이념이니 어느 정도 따라줘야 하지 않겠나. 선서(약속)도 했잖아. 그리고 이건 종교가 아니고 선생님의 지시에 대한 거야로 미묘하게 바뀌어지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그 과정에서 더 이상 비판할 마음을 포기하고 합리화하게 된다. 학생들에게 종교 의식의 강요라는 현실이 '이걸 왜 해

야 하지? 어떻게 학교에서 이런 일이.'에서 이제는 '이건 당연한 거야.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야.'로 바뀌어 간다. 에리히 프롬 선생은 자유로부터 도피라는 책을 통해 말했다.

"개성화가 진전되어 감에 따라 두 가지 가능한 결과로서 복종과 자발적 행동이라는 것이 생긴다. 개성화가 이뤄질 때, 인간은 무력감과 고독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발적 행동'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나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근원적으로도 인간은 자발적 행동을 선택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 복종이 미덕이라고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이 '자발적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

다시 특정 종교 의식의 강요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보자. 이와 관련된 선언이나, 법률적 내용을 검토해보자.

세계인권선언문 제 18조
"사람은 누구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선언문을 경구들을 모아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모욕하는 이들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세계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기본권을 담고 있는 선언이다. 이 선언에서 분명히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고려대 김선택 교수님께서 쓰신 헌법사례연습을 참고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종교적 행사의 자유, 종교의 결사의 자유 등은 종교결사인 법인 기타 단체에게도 인정되기에 기독교 재단은 법인으로서 선교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기독교 재단 산하 고등학교는 그 자체가 종교적 결사는 아니지만 선교 재단이 선교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종교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종교적 행위는 외부에 나타나는 행위로서 법률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기본권인 반면 신앙의 자유는 내심의 자유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다. 따라서 기독교 재단 산하 고등학교에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

교육기본법 제4조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학급 부회장,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청소년헌장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헌장은 상징적인 의미밖에 가지지 못 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청소년 헌장에서도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첫째, 미션스쿨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소극적 자유, 즉 침묵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종교 의식의 강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입학한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의 노래를 부르거나, 경전을 읽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둘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한 발전적인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입학 때, 특정 종교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선서를 한다든가, 중3때 고등학교 원서에 종교를 기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만들어 져야 한다. 소극적인 자유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되더라도 다른 종교를 가진 친구들이 학교 내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등 학생들의 적극적인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대화를 회피할 내용의 것들이 아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괴로워하는 학생들. 더군다나 그 현실에 세뇌되어 비판할 능력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아야 한다. 물론, 학생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인격체로 보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미션스쿨의 입장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유'의 개념은 18세기 서양에서 시작한다. 개개인이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라는 종교 개혁을 시발점으로 사상 ? 신념 ? 언론 ? 출판의 자유로까지 확대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자유'를 탄생시킨 것이다. 즉, 개인의 생활까지도 지배하던 종교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인간은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지나친 논리의 비약일 수도 있지만, 나는 바라보고 있다. 종교 교육의 선택권을 보장받음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유'라는 개념이 새롭게 도래할 것이라고. 학교 내에서의 맹목적인 문화, 학생은 무조건 선생님의 지시에 따르고 선생님의 말씀과 행동이 무조건 옳다는 식의 순종을 요구하는 문화에서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잘못된 것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로 탈바꿈할 것을 바라본다. 물론 이 과정에서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 가장 힘써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어느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할 것이다.

미션스쿨(종교재단사립학교)에서 종교가 강요되는 사례

◎ 서울시 예일초등학교, 예일여자중고등학교, 예일여자상업고등학교

1. 재단의 종교 : 기독교
2.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례.
 - 1) 월 -금 : 매일 오전 오후 10분간 약식 예배 - 묵도, 주기도문, 찬송가, 성경구절, 돌아가면서 기도...
 - 2) 토 : 오전 10분 약식예배, 오후 4-5교시 강당에서 전교생 예배
 - 3) 주중: 성경을 정규과목으로 공부.
 입시명문으로 평판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고등학교 배정받았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이 지켜온 강요에서 드디어 해방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졸업한지 한참 지났고 학교 대부분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으나 종교와 관련된 부분은 혐오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담임선생님이 하루 10분씩만 영어 단어 외워도 3년이면 얼마나!!!고 했던데 대해 학우들이 예배 10분씩 모아서 영어 단어 외웠음 얼마나!!!라고 비아냥거렸던 것이 생각납니다.

◎ 경기도 태성 중학교

1. 재단의 종교 : 기독교
2.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례.

우리 학교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리고 화요일마다 예배를 봅니다.

그런데 저는 예배는 자신이 기독교를 믿고 있으면 드리고 자신이 믿지 않으면 드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입학할 때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아침 자습시간, 그 중요한 시간이 저에게는 강압적 예배, 다른 행동을 하고 있으면 선생님께 맞기까지 하는 불쾌한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한번 씩 성경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 시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 시간에 듣기 싫은 사람까지 억지로 가르치고 시험을 보기까지 하는 이런 것이 저는 결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서울시 도봉구 정의여자 고등학교

1. 재단의 종교 : 기독교
2.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례.
 - 1) 아침마다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경건회
 - 2) 매주 수요일마다 역시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체플시간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 3) 매달 행해지는 헌금
 - 4) 학생회장이 되는 조건중 하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것
 - 5) 전학생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교장의 횡포

◎ 서울시 해성여자전산상업고등학교, 해성여자중학교

1. 재단의 종교 : 기독교
 2.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례
 고등학교는 매주 화요일 1교시 중학교는 매주 수요일 1교시마다 예배 그리고 주중 한 시간 종교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중학교는 잘 모르겠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고2부터 기말고사 마다 종교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을 치루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읽고 외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중 한 시간, 종교시간에는 번호순서대로 한명씩 기독교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배와 종교수업시간 때문에 7교시가 4번이나 있어 학교 다니기가 힘듭니다. 또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목사가 꼭 기도를 해서 기독교를 믿지 않는 학생들은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 부산시 지산고

1. 재단의 종교 : 가톨릭
 2.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례
 1) 교실에 태극기 대신 십자가가 달려있습니다.
 2) 일 년의 두 번의 미사는 전교생 모두 참석해야 합니다.
 3.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사례
 1) 일 년의 두 번의 미사를 제외하면, 매주 열리는 미사의 참석 여부는 학생이 선택하며, 불참하는 학생은 자율 학습을 한다.
 2) 종교 수업에서는 애니메이션 "강아지 똥"이나 영화 "Good Bye My Friend"를 보고 느낌을 발표하거나, 신자/비신자로 구분된 질문지에 신자는 종교를 가진 이유, 이점, 종교적 경험 등을 발표 해 보고, 비신자는 신자를 볼 때의 느낌 등을 발표했습니다. 타 종교에 대한 배척이 없이 모두 존중받습니다.

[성명서] 대한민국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를 위한 선언

“우리에게 부당한 종교 강요를 하지마라!”

저희들은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하는 권리를 찾기 위함입니다.

헌법 제 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문 제18조 “사람은 누구나 사랑,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 헌장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믿고 싶은 종교를 선택하고 또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움의 공간인 학교에서 종교의 자유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한 종교의식의 강요는 교내에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아버렸고, 또한 그들 중 일부 학생들에게는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인(양심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침해받고 있는 학생의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또한 미래에 대한민국의 교육제도에 있을 학생들에게 가해질 '부당한 종교 강요'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이와 같은 선언을 합니다.

선언 하나, 강제적인 종교의식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라.
선언 하나, 학생에게 신앙 불표현(침묵)의 자유를 보장하라.

- *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는 구체적인 사례
- 추천제로 입학하는데, 특정 종교 의식을 성실하게 받겠다는 선서를 하게 됩니다.
- 매일 아침 5~10분간 특정 종교 의식을 강요받고, 침묵할 권리가 없습니다.
- 매주 1시간 특정 종교 의식을 강요받고, 매주 1시간 특정 종교 교육을 받습니다.
- 교실에 태극기 대신에 특정 종교의 상징물이 달려 있습니다.
- 종교의식을 거부하면 진학을 권유받습니다.

2004년 7월 3일
 종교의 자유를 위한 학생 모임
 cafe.daum.net/whdrytkfkd (한글로 '종교사랑')

[성명서] 강의석군 부당 징계 저지하고 학내 종교의 자유를 달라

“인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종교의식에 반발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와 온라인 카페 운영해왔던 강의석군이 지난 26일, 사실상 전학을 가지 않으면 제적을 하겠다는 학교측의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에 현재 강의석군의 학부모는 전학하지 않겠다는 뜻을 학교측에 전달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학교측에서는 전학 이념을 부정하고 다른 학생을 선동하였기 때문에 전학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적할 것이며 징계사유는 종교의 자유를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요구 과정에서 학교의 허락 없이 학내 방송을 하였다라는 점,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정규수업시간 이후에 학교 밖으로 나갔다는 점, 그리고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학교 방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학교의 부당한 현실에 대해서 강의석군은 오랫동안 고민해오다가 고통받은 다른 친구들을 대신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용기 있게 학교와 사회에 던진 강의석군을 징계하고자 하는 학교의 방침은 부당하다. 정당한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점을 시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징계를 내리고 전학 처분을 강요하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징계과정에서 합법적 절차의 부재와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해서 우리는 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 선도위원회의 징계사유는 정당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조차 주지 않는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결과를 통보하면서 전학을 강요하는 처사는 옳바르지 않다. 이 과정에서 강의석군은 심적으로 많은 상해를 받았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우리는 대광고등학교에서 강의석군에게 내린 부당한 징계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우리는 대광고의 특정종교 강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에서의 종교행위는 선택적이어야 한다. 아무리 특정 종교적 '건학이념'을 가진 학교라 하더라도 개인의 종교선택권을 박탈할 권리는 없다. 이것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에도 어긋난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교리에도 어긋난다

또한 우리는 이 문제가 종교를 넘어서 학생인권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어리다는 이유로 자신의 의사와 양

심을 침해받는 행위를 강요 받아서는 안된다. 이에 우리는 지금까지 대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졌던 특정 종교에 대한 강요를 그만두기를 바란다. 대광고에서는 학생들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 청소년단체를 비롯한 학부모단체와 모든 시민,교육단체들은 강의석군의 징계가 철회되고 대광고등학교 및 전국의 초/중/고 종교재단이 학생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종교의식, 종교행사를 참여시키는 것을 중단할때까지 지속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사항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한 학생을 '선동한 점, 무단방송 사용한 점,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학교 밖을 나갈 점'을 빌미로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부당하게 징계를 하려는 학교의 처사에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종교의 자유를 외친 학생을 학교에서 내쫓으려는 선도위원회 결정을 무효화하라!
2. 강제 제적 처리를 강행하려는 대광고는 즉각 각성하고 조건 없이 강의석군을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라!
3. 강의석군이 외쳤던 종교의 자유 운동은 정당하다! 강의석군이 학교에 요구한 건의사항을 즉각 수렴하라!
4. 서울시 교육청의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종교 행사를 강제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대광고등학교는 각성하고 강제 종교의식, 행사를 중단하라!

- 학급예배때 강제로 번호 순으로 기도를 하는 것을 중단하고 원하는 학생만 하게 하라!
- 전체 예배때 비종교, 타종교 학생들까지 반드시 참석하게 하지 말고, 원치않는 학생들은 자율학습을 하게 하라!
- 학급 부회장을 종교부장으로 하지 말고 부회장과 종교부장을 구분하여 구성하라!
- 학생회 회장, 부회장은 교회를 다니는 자만 해야 하는 현 학생회칙을 개정하라!
- 3박 4일 생활관 합숙때 기도와 찬송만으로 꼭 찬 일장에서 기도와 찬송을 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대안을 세워라!
- 입학할 때 기독교 교육을 잘 받았다는 선서를 하는데 이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내용을 잘 알려주고 자신의 의사 표현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라!

2004.6.30

강의석군 부당 징계 저지와 학내 종교의 자유를 위한 연대회의

[성명서] 학내 종교 자유를 위한 청소년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우리가 의식을 살려 낼 겁니다" 강의석군 학내 종교 자유를 위한 청소년 공동 선언문



지난 6월 17일 대광고 학생회장인 강의석군은 교내방송을 통하여 학교 내에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요일예배를 거부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고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조, 중, 고 예배 강요 반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학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강의석군에게 전학을 종용하였다. 하지만 학교에 남길 원했던 강의석군은 끝까지 학교의 전학요구를 거부하다 결국 학교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적을 당하게 되고 이에 맞서 법원에

학교법인을 상대로 퇴학처분부효소송과 퇴학처분효력정지 및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 결과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퇴학처분부효소송의 판결의 확정시까지 강의석군을 대광고등학교 학생으로 인정하였다.

이 판결로 인하여 강의석군은 다시 학생의 신분으로 학교로 복귀하였으나 학교내 예배선택권을 주장하며 43일째 살인적인 단식투쟁을 하고있다.

분명 대한민국 헌법은 20조 1항을 통해 국민의 종교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광고의 사례 (강제적인 종교의식, 종교를 통한 학생회 임원 자격 제한 등등) 보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받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대광고의 교직 역시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이 아닌 침해하고 있는것을 알 수 있다. (법학계의 학리해석역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교직이 충돌한다면 당연히 헌법이 우선한다는 게 정설이다.) 또한 강의석군에게 징계를 주면서 징계사유로 내걸었던 8가지사유를 보고 있으면 그것이 제적처리까지 갈수 있는 사유인지 의문이 든다.뿐만 아니라 예배선택권을 주장하면서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살인적인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강의석군에게 비상식적인 태도로 모르쇠 일관하고있는 대광고를 보고 있으면 정상적 가치관을 갖고있는 교육기관인지 의심이 든다.

분명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어떤 권리로도 침해 할 수 없다. 하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사회에서는 기본권을 침해 받는 경우가 허다한 게 현실이고(국가 인권위원회가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강의석군 역시 이러한 현실의 피해자이다. 하지만 강의석군은 모두가 그저 묵묵히 참고 넘어갔을 상황에서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고 이러한 행동은 극찬 받아 마땅하다.

늦은감이 있지만 강의석군의 이렇게 용기 있는 뜻과 행동에 감사와 지지를 보내고 우리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주장한다.

요구 하나, 종교학교는 종교의식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라
요구 둘, 교육인적자원부는 지금 당장 학내 종교활동의 예배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2004.9.23
학내 종교 자유를 위한 청소년 대책 위원회

청소년 종교 인권을 위한 청소년들의 모임 로이, 18세선거권나눠주기 공동연대,미선스쿨 종교자유 카페, 대동령 청소년 특별회의 추진단, 교육개혁시민연대, 대구문화아카데미 우주인,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스스로넷, 시민사회 청년활동가 모임,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학생네트워크 젊은 우리, 열린우리당 청년위원회, 전라북도 청소년자치위원회, 정치개혁대학생연대, 진보적 청소년연합, 청소년 독립신문 바이러스, 청소년정치참여네트워크, 충청남도 청소년자치위원회, 충청북도 청소년자치위원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회의, 1318정치참여연대,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ADOS, Distopia, KYEC, 발전하는 학생회 가자, 청소년 반전 모임 등

학교의 당당한 주인이 되자

2004 학생회 법제화 운동 보고

- 박상호(학생회법제화운동본부, 고양시 학생회 모임 "새늘" 졸업생)

1. 학생회 법제화 운동 경과 보고

- 9월 10일 :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제출
- 9월 16일 : 학생회 법제화를 위한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기초 토론
- 9월 23일 : 학생회 법제화 세미나(별첨2) 및 학생회 법제화를 위한 연대회의 초동 모임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전교조,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고양시 학생회 모임 "새늘", 발전하는 학생회 "가자")
- 10월 20일 : 2004년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학생자치활동 현황 보고서, 학생의 자치권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가?" 발행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민주노동당 학생청소년위원회 공동 발행
- 학생회 법제화 학생용 선전지 발행(*별첨2)
- 10월 31일 : 학생회 법제화를 위한 학생 간담회 -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준비위원, 고양시 학생회 모임 "새늘", 발전하는 학생회 "가자",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등 40여명 참여
- 11월 17일 : 학생회 법제화 선전전(대학로)

전 2003년에 한 고등학교의 학생회장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학우들에게 용의복장 캠페인 보다는 무언가 학우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고, 의미 있는 사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학생회의 위치는 학생들을 위한 일꾼이 아닌, 선생님을 위한 일꾼이었습니다. 축제 역시도 모든 부분을 학생회가 맡아서 한 것이 아닌 자잘한 일들만을 하고, 학생의 날 행사는 아무 이유 없이 하지 말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학생회를 하면서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께 꾸중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말은 내 옆의 학우들이 "학생회는 도대체 뭐하나?"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 학생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학생회들은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하는 것입니다. 학교 이름만 다른 똑같은 학생회적! 학교생활규정! 그 이디에도 학생회가 자유로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로이 대의원회의를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는 보장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학교 안에서 학생의 두발, 용의복장, 급식문제... 등등을 학생문제를 학생 스스로가 이야기 할 수 있는 곳, 이야기해야 하는 곳이 학생회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굳이 따져 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되었고, 학생들의 입장을 가장 잘 표출할 수 있는 대표기구가 학생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대다수 중-고등학교의 학생회는 전혀 학생의 대표적인 자치기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회의 테이블인 대의원회의에서조차도 교장선생님의 훈화가 이어지고, 학생부장 선생님은 건의사항을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못 박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학생들의 건의사항은 그저 아이들의 불만일 뿐이고, 학생은 교육의 받아야하는 객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학생회가 무슨 존재가치가 있으며, 학생들을 위한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학생들의 의견을 당당하게 이야기 할 수 있었습니까?

학생회 법제화는 학생회 임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대의원회의의 소집도 학생들이 원하면 언제나 이루어 질수 있으며, 학생들의 건의사항이 현실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학교의 운영위원회에 참가하여 학생들의 입장을 밝혀낼 수 있도록 학생들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 받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에 있어서 학생회 법제화가 학생들에게 있어서 그다지 큰 의미를 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그 도록 원하는 두발자유, 급식문제 해결 등의 학생들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학생들의 대표기구인 학생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확실하고 바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학생회 법제화를 위해서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발전하는 학생회 모임 "가자", 고양시 학생회 모임 "새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는 학생회 법제화 운동본부는 2004년 하반기에 학생회 법제화를 위한 사업을 펼쳤습니다.

- (1) 학생회 법제화 세미나
- (2) 학생회 법제화 팸플릿 제작
- (3) 학생회 법제화를 위한 청소년 간담회
- (4) 안티 수능 페스티벌에서 간단한 선전전

단기간에 몇 가지 사업을 하면서 그만큼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학생회 법제화 운동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학생회 법제화가 왜 필요한지 궁극적으로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명문의 법제화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더불어 운동본부에서 말하는 학생회 법제화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학생회 임원을 포함한 학생들 대다수의 문제의식과 더불어서 각각 학생회들의 자체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적지만 "가자"나 "새늘" 청소년과 학생들이 주축으로 이루어지는 모임을 통해서 이야기도 해보았습니다. 학생회 법제화 역시 다른 누구도 아닌 학생들이 이야기를 해야 그 필요성과 의미가 부각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학생일수 없고, 학교를 졸업한 청소년 활동가도 학생일 수 없습니다. 학생회 법제화를 위해선 그 누구도 아닌 학생들이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2004년 하반기 끝나가는 시점에서 학생회법제화운동본부 역시도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학생회법제화운동을 벌여나갈 것 입니다.



첨부 - 학생회 법제화 세미나 자료

● 학생자치와 인권을 위한 지름길, '학생회 법제화'

학생회 법제화는 단지 학생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치와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 교사, 학부모, 그리고 학생의 대표기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학생 자치, 학생 인권은 다람쥐 쳇바퀴인가.

- 중고등학교 학생회 임원들의 답답한 현실, 아무리 학생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 학생은 학교의주인이 아니라 단지 교육받고 훈계 받아야 할 대상,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 학생의 참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생활규정, 학생들은 이해도 할 수 없고 납득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끼리끼리 나누는 불만 말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직접선거로 회장을 뽑아도 학생회실 하나 제대로 없이, 학생들의 답답한 부분을 하나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다'라는 공허한 슬로건을 보면서... 좌절과 패배의식, 그리고 학생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을 배울 것이다. 민주주의는 어디에 있는가.
- 무엇보다도 답답한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 누구나 인식을 같이 함에도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

● 학생회 법제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

- 학생의 대표 기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학교 안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학교운영위 참가/급식 선택/ 학생회실 확보 등)
- 스스로의 권익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
-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결정한다. (직선제 선거/예산권확보/공약 실현/교사개입금지/생활규정 재개정권)
- 생활에서부터 배우는 민주주의(회의/토론/공동실천/의견수렴)

당신이 학생회를 아는가?

박상호(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준비위원/
고양시학생회모임 새날 졸업생)

- 1.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은 학생의 대표를 학내에 있는 학생들의 대표자로 보지 않는 것인가?**
학생회 간부나 대의원들은 적어도 한 학교에서 투표라는 공식적인 절차로 인해서 선출된 것인데 대표자적인 위치에서 학생대표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가르쳐야 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알아서는 안 되는 어린 학생으로만 보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 2. 학생회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조차 지원되지 않는 것인가?**
학생회는 이름으로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안 됩니다. 분명 선거 때 내세운 공약이 있을 것이고, 학생회의 이름으로 할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현실 학교의 학생회는 그런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시설조차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니다. 학생회의 공간과 컴퓨터, 복사기... 등등의 시설은 기본적인 학생회의 활동을 위한 필수 조건인데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들 자체가 무언가 학생회가 해야 할 일들을 없애고, 축소시켜 가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 3. 왜? 학생들을 교육을 받는 객체로 보기만 하는가?**
학교의 주체는 학생, 교사, 학부모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학교현실에서 학생은 언제나 주체가기 보다는 객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은 학생들을 볼 때에 가르치는 대상으로 보지 학교를 좋게 그리고 바르게 바꾸어 나아가는 데에 있어서 학생을 주체적인 공동의 주인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 자체가 학생에 대한 의식, 더 나아가서는 질문1에서 말한 학생대표자를 대표자로 볼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 4. 학생회가 학내의 학우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가?**
이 문제는 학생회 법제화라든지 제도적 차원의 문제와 함께 가야하는 어찌 보면 학생회 법제화보다 중요한 문제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학생들이 학생회를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회가 학생들에게 그 어떤 무엇도 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의원대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시원하게 처리해주지 못하고, 축제를 제대로 멋지게 기획하고 진행하지 못하는 문제들 어찌 보면 학생회자체의 능력부족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의 학생회는 그런 것들을 실천에 옮기는 데에 있어서조차 완전히 배제 되었다는 사실자체가 핵심입니다.

학생회 법제화의 의미와 학생회 법제화를 통한 학생생활의 변화

이문석(전교조 학생청소년위원회)

학생회 법제화는 학생회의 권한과 책임, 활동을 법을 통해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다. 학생회에 대한 현행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17조 "(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에 있다. 하지만 규정의 애매함과 학교의 권위주의적 구조, 입시교육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경쟁교육의 심화로 인해 학생자치활동은 전혀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학생회의 권한과 책임, 활동을 법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법에 기술해야 하는 학생회의 권한과 책임, 학생회의 활동은 무엇인가?

학생자치활동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가는 자율적인 학습과정이다. 자신의 인권과 권리는 물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며, 다양한 토론문화 속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등 그들의 자치능력을 키워가는 과정인 것이다.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정도는 미래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이다. 학생들은 일방적인 지도가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에 알맞은 지원이 필요하며 공동체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의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므로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최소한 헌법에 규정된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1989년 채택한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수준의(학생의 권리 :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출판 및 표현의 자유, 학교운영 참가의 권리, 학생관련 규정에 대한 의견의 권리) 학생권리를 학생회를 통해 실현 시킬 수 있도록 법적으로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학생회 법제화를 통한 권리의 보장이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첫째, 학교가 민주주의의 교육의 실천 장이 될 것이다.
교육은 수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참여와 실천을 통해 그 구체성과 현실성을 띠게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학교는 지식전수의 수업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목적의식적인 현실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핵심 지향이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는 화석화된 문구와 지식으로 체득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학생들에게 권리를 나누어주고 그 책임을 동반할 때 비로서 학교의 민주주의 교육은 살아 숨쉬게 될 것이다.

둘째, 학생생활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다.
현행 생활규정은 대부분 교육주체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규칙이다. 그러므로 교육주체들



은 생활규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지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모든 규칙은 구성원의 대표 또는 일정기준을 갖춘 구성원들에 의해 발의되며 구성원의 대표기관
 결의 또는 구성원의 직접 결의를 통해 결정된다. 하지만 학교의 생활규정은 그렇지 못하며 결국
 준수의 의무를 강제할 수 없는, 준수 사항 자체가 합리적일 수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의적인 구성과 집행으로 인해 학생생활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힘에 의해 관리되는 수
 준에 머무르고 있다. 힘에 의한 유지는 다시 힘에 의한 학생간의, 교육주체간의 관계를 정당화하
 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민주적으로 생활규정을 재개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합리적인 생
 활교육을 시작하는 토대를 세워야 한다.

셋째, 학생 인권 상황의 개선이 이루어 질 것이다.

학생 인권 문제는 여러 번 문제가 된 바 있지만, 아직도 군사문화와 입시구조에 눌러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구조를 보장은 곧 학생 인권의 개선과 직결될
 것이다.

넷째, 학생 자치활동이 활성화 되고, 지역 문화의 주체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도 학생회동아리의 인내활동과 사회활동을 생활규정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
 다. 지역 동아리 인내활동 등을 통해 지역문화를 함께 고민하며 실천해 나가고, 학생회들의 모임
 을 통해 시로를 배우고 함께 활동해 나가며, 교육주체로서 학생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공교육이 보장할 때 비로소 학교는 학생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곧 지식은 살아 숨쉬게 될 것이며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문화 창조자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는 생활규정의 제약을 없애고, 교
 육청과 교육부는 지역과 전국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복지부 구조를 만들어 행재정
 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 국정감사 평가보고

국정감사를 마치며...

- 최순영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보이지 않는 힘, 기득권의 벽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이상이 대지에 떨어져 싹을 틔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소수'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요즘은 길거리를 가다가 교복을 입고, 가방을 둘러메고 옹기종기 걸어가는 학생들을 보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차로 뒤범벅인 댐, 교차로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학생들, 흔히 우리가 회
 망이라고 얘기하지만 학교로 향하는 학생들, 떠나보낸 부모님들은 근심과 걱정투성이라는 생각을 하
 면,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교등급제 등을 통해 드러난 보이지 않는 기득권
 의 거대한 벽을 실제 국정감사 ④ 【?피부로 느끼면서 더더욱 그랬습니다.

우리와 기대속에 묵묵히 일하는 다수 국민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또 여기까지 진보정당의 씨앗을
 뿌리고 키워온 당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진 10석의 배를 타고 국회에 들어온 후 국정감사
 를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당으로 봤을 때는 언론의 과도한 기대가 시들해지고 기쁨이 빠지는 그 순간,
 본격적으로 우리가 국정감사를 서서히 준비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6월은 보좌진구성을 마무리하고 국회문화에 적응하는 시기였고, 7월은 당과 의원단과
 의 관계를 설정하고, 의원단과 각 의원실의 내용적 결합을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쉴 틈없이 바쁘던
 그 시기에 우리 보좌진들은 차근차근 교육, 여성, 학부모, 장애인, 이주노동자 단체들과 의사소통 체
 널을 만들며, 현안문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지금보면 이들이 국감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닙니다. 민주노동당의 힘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소수'의 자그마한 발걸음을
 내딛으며 8월 휴가가 끝나자마자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녹여내고자 했습니다.

저는 국정감사에 남다른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79년 YH 투쟁이 당시 야당이던 신민당
 사를 점거하면서 국민들에게 비로소 알려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국회에서 국정

감사중 야당 국회의원들이 노동부에 질의를 하면서 메스컴을 타고 언론에 그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더 국정감사를 임하면서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르기도 했습니다.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언론을 타고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보력이나, 힘에서 열세일 수밖에 없는 민주노동당 의원으로서 역시 믿고 의지할 곳은 우리 국민과 당원들밖에 없었습니다. 6월부터 8월휴가 전까지 교육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간담회, 공개토론회를 매주 한 두 차례 가지면서, 자신감을 키워나갔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키고, 마냥 부족한 학부모로서 교육을 바라보고 평가했던 입장에서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학부모가 아니라, 동지로서 만나고 교감하는 것만큼 더 교육적인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중들을 만나며, 토론하고, 이해하며 국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올바른 교육, 여전히 차별받는 여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대안을 찾아나설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도출된 것이 국감의 전략과 의제설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교육위에서 여성위에서 의원은 홀로지만, 내 뒤에는 교육현장, 병원현장, 사회곳곳의 여성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기대한 소수' 전략이었습니다. 공교육강화, 교육복지 실현, 인권과 노동권 강화, 민족통일교육, 여성차별철폐, 보육문제해결 등의 핵심의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약속했습니다. 한건식, 폭로식 국감이 아니라, 여론의 주목을 실령 받지 못하더라도 정책중심의 국감을 충실히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녹여나가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철저히 국민 그리고 당원과 함께하는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학교급식, 사학개혁, 장애인교육권, 고교등급제 등 입시위주 대입제도 개혁, 평준화 및 무상교육 확대 등 교육공공성 강화 등을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교육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준비하고 진행했습니다. 특히 의원실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만들어낸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3권(우리 아이들에게 최상의 급식을-학교급식법 정책홍보자료집-)('노동이 아름다운 대학을 위하여-대학내 용역노동자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힘내라 학생회, 미래는 당신들의 것-학생자치활동 현황보고서-)은 진보적 정책을 함께 써내리간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이는 앞으로 민주노동당이 정책을 양손에 들고 국민들에게 알려나가는 데 있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서울, 인천, 강원, 대전, 대구경북, 제주 등 지역교육청 국감 때 민주노동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성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민주노동당이 헌신적으로 진행했던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 농민, 지역민들의 응원 얻을 수 없습니다.

각성은 그 자체로서 이미 빛나는 달성입니다.

각성은 그 자체로서 이미 빛나는 달성입니다. 경북교육청 학습교구 납품비리는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북교육청 학습교구 납품관련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의 자료제출 거부 등을 보면서 자존심이 무척 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시정해야겠다는 오기마저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이 말단 공무원들을 속이고, 의원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파렴치함을 보이고서도 반성은커녕 비리가 탄로날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은 우리 교육행정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료요청 거부 등 국감에 대한 방해를 보면서 더 끈질기게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원들의 얼굴을 봐서라도 민주노동당의 정지력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국민들이 깨끗한 학교행정, 부정부패 없는 학교행정에 대한 바람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역 언론과 지역민의 폭발적인 관심은 이미 국감시기를 거치면서, 교육청 고위공무원들이 더 이상 마음대로 교육예산을 운용할 수 없음을 각성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라는 더러운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저게 정쟁이구나' 보이지 않는 힘으로 국감장을 훼손해서야...

국감시기 중 조선의원으로서, 가장 당혹스러웠던 점은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이 제기한 금성교과서 역사기술에 대한 문제제기로 국감이 파행을 겪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동네시장의 아줌마, 아지씨들이 그토록 귀가 따갑게 얘기하던 '정치인들 싸움질 좀 하지 말고 경제나 쟁거라'라는 말, 그 말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맞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보고 있는 가운데, 앞에서 생생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정쟁이었던 것입니다.

여성위도 파행은 없었지만, 여야의 정쟁이 되풀이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된 질의보다는 당장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성매매관련 문제에 대한 질의는 못물처럼 쏟아지고 정말 일하는 여성들이 절절히 느끼고 염원하는 보육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은 비커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속이 타는 듯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여성정책을 다루는 단 하루밖에 할당되지 않은 국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성매매관련법 시행에 쏟아 부으며 이전 투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저게 그거였구나, 저게 정쟁이구나, 왜 정쟁을 국민들이 싫어하는지를 옳은게 경험하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국민들의 따가운 질타소리가 온 몸을 휘감는 듯했습니다.

동료 국회의원, 국민들께 제안합니다.

상시국감을 적극 고민해야 합니다. 피감기관에 대한 밀도있는 국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견제체계, 정책토론의 장 마련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상임위원회 운영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제별 심화국감의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부처와 자료공유체계를 마련하고 의원마다 유사한 내용임에도 다른 틀의 자료요구는 매우 소모적입니다. 또 자료를 준비하는 공무원들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오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감백서 발간, 국감평가 토론회, 주요의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당원들과 국민들의 꿈은 대지에 떨어져 반드시 새싹을 틔우리라 확신합니다.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국정감사는 소수정당의 한계를 극복하는 유일대안입니다. 하지만 성과 못지않게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경험부재, 세련된 정치력의 부재, 효과적인 여론작업, 인력과 자금부족 등은 과감한 사업시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의제 나열식 질의로 집중점이 부족했던 점은 앞으로 다듬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교육과 여성관련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국회활동을 더욱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장과 책임감의 연속이었던 국감이 이제 끝나고 방송인론 등에서 평가가 한창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장애인 동지들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와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과 집회를 하고 있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저녁에는 의정부 보권선거 지원을 하면서 도 3주동안 쉴새 없이 진행된 국감이 떠올랐습니다.

이상은 대지에 떨어져 반드시 새싹을 틔우리라 믿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새로운 100년이 이제야 시작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당원여러분, 국민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간직하며, 사회적 약자의 현실을 잊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힘, 기득권의 힘에 맞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원동지들,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학부모회, 여성노조, 급식단체 등 함께 했던 많은 동지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위원회 적극 활용하고 힘을 모아주십시오

구정인 |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준비위원장

1. 청소년위원회 신설의 의미

정당사상 처음으로 민주노동당에 청소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청소년들은 정치와는 무관해야 하고 오로지 공부에 매진하며 보호와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했던 지금까지의 통념으로 보면 획기적이고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특히 <정치>와의 관련성은 순수성을 의심받게 하는 요소였는데 정치활동을 하는 정당이 앞장서서 청소년들의 정치활동을 공개적으로 권장하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본격적인 청소년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민주노동당이 청소년을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주체로 인식하고 존중한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우리사회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직접 만들었고 서민들을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이런 민주노동당에서 청소년위원회가 최초로 만들어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청소년의 목소리는 청소년 자신이 목청껏 외칠 때 가장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두발규제의 문제, 그 외에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들, 억압적인 입시구조, 사회정치참여 활동에 대한 차단과 통제 등 청소년들의 삶을 가로막는 모든 문제에 청소년들이 직접 나서고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민주노동당의 청소년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청소년의 정치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확대한다.

민주노동당은 당원 당우로 가입하면 다른 당원들과 마찬가지로 평당원으로서 당 내에서 투표권도 행사하고 신입당원교육부터 각종 지구당활동에도 참여하고,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까지 다른 당원들과 마찬가지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과 집행에 참가합니다.

사회 어느 곳에서도 심지어는 학교 안에서 자기문제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조차 체계적으로 배제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민주노동당의 민주적 운영과 정치활동은 그 자체로 훌륭한 정치참여이자 민주주의 구현과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3.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 이제는 제도적으로 바꿉시다.



청소년들의 삶을 억압하는 여러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온 사회가 떠들썩하도록 두발규제 철폐운동을 벌였는데 두발규제가 조금 완화되었을 뿐 철폐되지 않았고, 0교시 폐지운동을 해서 0교시를 없애기로 합의했는데 갖가지 편법이 난무합니다. 학생회 활동은 아무리 의욕을 내서 진행해도 마지막에 교사의 '안돼' 한마디면 끝납니다.

청소년들이 그동안 자기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무수히 싸웠지만 그 성과가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이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끝났습니다. 개별 개별의 사안들도 근본을 따져보고 모아보면 한꺼번에 전부 바꿀 수는 없더라도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공고하게 안착시킬 수 있는 사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학생회 법제화'운동을 시작으로 청소년들의 요구를 모아봅시다. 산발적인 저항을 연대하고 집약시키면 제도도 바꿀 수 있는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힘을 모아봅시다.

4. 청소년들이 처한 문제에 대해 당의 입장을 밝히고 정책화하고 입법화한다.

'학생회 법제화 입법운동', '고교등급제 반대 청소년 기자회견', '청소년관련 업무 여성부 이관에 대한 반대' 등 청소년과 관련된 당면 사안에 대해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항의하며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화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여기에 이 입법 활동에 힘을 실기 위한 다양한 대중 활동을 단체들과 연대하여 펼쳐나갑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단체의 활동과 다른 정당 활동일 것입니다.

특히 최순영의원과 함께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 100여개 이상 중고등학교의 자치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여기에 학생회 임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이 자료집 발간을 통해 학생자치활동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을 실정하고 <학생회 법제화>라는 당면목표를 세워 운동본부

를 만들고 활동했던 경험은 정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5개월짜리 짧은 활동기간이었지만 내년부터는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여러 청소년운동의 요구를 답아서 전략적으로 국회를 공략하는 활동을 벌여낼 것입니다.

5. 당 청소년위원회에 힘을 모아주고, 또 활용하자!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의 입법 활동이 높게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시민단체들과의 연대였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시민단체들의 지혜와 요구가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인들을 통해 고스란히 17대 국회에 담겼습니다. 물론 아직 소수정당이라 문제제기를 하고 방향을 제시할 뿐 적극 추진하거나 실현시킬 힘이 미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정감사를 받았던 행정기관의 관료들이 뽑은 Best5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선정될 만큼 그 정책과 대안들은 날카롭고 정당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의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청소년 운동가들, 청소년단체들, 각종 청소년들의 모임들이 쌓아온 그간의 지혜와 성과들을 모아야 합니다.

또한 각 단체와 운동분부는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야 바랍니다. 그 활동에서 기대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기대보다 더 책임 있는 청소년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8~12월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활동일지>

(1) 준비위원회 구성

- ① 준비위원 모집 및 구성 : 1318당원 5명을 포함한 준비위원 총 15명 구성
- ② 준비위원회 체계 : 전체 준비위원회의를 월1회, 기획단 회의 2주 1회 정도 진행
- ③ 홈페이지 및 1318당원 메일링 : 홈페이지 개통, 1318당원 메일링(수시로)
- ④ 지역간담회 : 시도위원회 및 지구당의 청소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간담회

(2)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 ① 청소년 정치캠프 : 8월 5일~7일(2박 3일간) 총48명 참가
- ② 당사 견학 프로그램 / 청소년을 위한 민주노동당 홍보 매뉴얼
여성단체 청소년 40여명 / 신일중학교 NGO반 30명 / 경기도선관위 학생회장 80명
- ③ 농촌봉사활동 / 수해복구활동
당 전체 수해복구, 농촌봉사활동에 청소년, 청소년단체 일꾼당원 참가
- ④ 청소년 아카데미(2005년 1월 예정) :
고3수험생과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3일 4강으로 진행

(3) 청소년관련 운동

① 학생회 법제화운동

- 1) 국정감사 자료집 발간
전국의 150여개 학교 학생회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학생회 활동현황, 학생회직 수합하여 통계 및 분석, 학생회임원들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학생과 교사의 답안 비교분석, 그 외 자치활동 자료 첨부하여 자료집 발간
- 2) 학생회 법제화 운동본부 구성
전교조 학생청소년위원회, (사)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학생회센터, 발전하는 학생회 모임 '가자', 고양시 토론모임 '세늘' 등 학생회 활동관련 단체, 모임과 운동본부 구성
- 3) 학생회 법제화 선전물 제작
학생회임원들에게 학생회법제화에 대해서 알릴수 있는 선전물 제작 배포
- 4) 학생회 임원과의 간담회 개최
학생회 임원들과 학생회 활동의 현황, 문제점, 법제화의 필요성, 운동의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 개최

② 고교등급제 반대 기자회견

2008년 대학입시 개선안 발표에 이어 밝혀진 사립학교의 고교등급제 시행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교

육인적자원부(정부종합청사)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진행

③ 이라크 파병반대 릴레이 단식

당 지도부의 단식으로 시작된 파병반대 릴레이 단식에 1318당원 20여명 1일단식 참가

④ 국가보안법 폐지 청소년선언 및 캠페인 / 국가보안법 폐지 청소년골든벨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소년선언 조직, 명동에서 거리 캠페인
국가보안법 폐지 청소년골든벨 개최 : 청소년 100여명 참가(청소년당원2명 공동1위)

⑤ 청소년 5대 인권운동 토론회(12월 21일 개최예정)

5대 운동(강의석군 종교의 자유운동, 인천외고 투쟁, 18세 선거권 낮추기운동, 학생회 법제화운동, 강제자율보충 신고운동)을 한자리에 모으고 경과와 교훈을 들어보고 최순영의원의 국회교육위 활동보고, 청소년위원회 활동을 보고하는 자리

(4) 연대활동

- ① 18세 선거권 낮추기 공동연대
18세 선거권 낮추기 공동연대의 활동에 발맞추어 '선거권 낮추기 토론회'Fastival' 참가
- ② 학생청소년운동 네트워크
'학생청소년운동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③ 전국 청소년단체 연대회의 참가

(5) 기타

청소년 사회의식 설문조사 : 인터넷 청소년독립신문 '1318virus'와 함께 공동설문조사



제2회 민주노동당 청소년 정치캠프에서